

II. 핵심이슈

美관세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조사국 임웅지 권영순 진찬일 노선화 민초희 이택민 강 산
이종웅 고민지 강보민 채민석 장태윤 위승현 하정석
윤종원 정선영 이재호 최 준 이준호 정희완

목 차

검토 배경	47
美관세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	48
美관세정책의 전달경로와 우리 경제 영향	53
시사점	65

美관세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KEY TAKEAWAYS

- ① 25.7월말 미국과 주요국간의 관세협상 합의로 관세율과 관세 적용 시기 등이 큰 틀에서 확정되면서 美관세정책의 전체적인 윤곽이 보다 뚜렷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인 협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율^{평균}이 기존 한·미FTA에 따른 무관세에서 15% 내외 수준으로 크게 높아졌다. 이에 따라 對미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
- ② 모형 등을 통해 그 영향을 분석한 결과, 美관세정책은 시행 이전과 비교할 때 우리 성장률을 금년과 내년 각각 $\Delta 0.45\%p$, $\Delta 0.60\%p$ 큰 폭 낮추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Delta 0.15\%p$, $\Delta 0.25\%p$ 낮추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美관세의 영향은 크게 ①무역, ②금융, ③불확실성 경로를 통해 나타난다.
 - ① 무역경로를 통한 성장 영향은 올해 $\Delta 0.23\%p$, 내년 $\Delta 0.34\%p$ 로 분석되었다. 우선 美관세로 미국으로의 수출비용이 상승하고, 미국의 물가상승으로 총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對미수출이 크게 줄어든다. 對여타국 수출의 경우에는 미국 시장을 대체하는 전환수출이 일부 늘어날 수 있으나 여타국 성장 둔화에 따른 수입수요 위축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對여타국 수출 전체로는 감소한다. 품목별로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금속·기계, 對미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 등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 ② 금융경로를 통해서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내수를 중심으로 각각 $\Delta 0.09\%p$, $\Delta 0.10\%p$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美관세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임으로써 관세가 없었을 때에 비해 미국의 통화정책이 더 긴축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이로 인해 국내외 금융여건 개선이 지연되면서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과급된다. 실제로 이번 美관세정책으로 연준의 금리인하 결정이 늦춰지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 ③ 불확실성경로는 내수를 중심으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Delta 0.13\%p$, $\Delta 0.16\%p$ 낮추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기업과 가계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경제적 의사결정을 지연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와 소비가 위축된다.
- ③ 美관세정책 시행 이후 최근까지의 국내외 영향은 상호관세 유예^{4월초→8월초}, 기업의 부담흡수 등으로 우려보다는 작았지만 앞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미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으며 전세계 제조업의 신규수출주문이 위축되고 있다. 우리 對미수출 또한 철강과 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악화되고 있다.
- ④ 美관세정책은 앞서 분석한 단기적인 시계에서의 경제 영향뿐 아니라 글로벌 무역질서, 나아가 국내외 정치·경제, 산업구조의 변화까지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미국으로 향하던 여타국의 수출이 국내로 전환될 경우 산업생태계에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미국 현지생산 확대는 국내산업의 공동화를 야기할 위험이 있으며, 그 결과 고용이 위축되고 인재 유출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듯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관세라는 대외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정부 그리고 가계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경제구조를 혁신하며 새로운 기회요인을 찾아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야 하겠다.

I. 검토 배경

1. 美 新행정부가 관세정책을 발표한 이후 전세계는 통상환경의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해 왔다. 미국이 다양한 관세조치를 공세적으로 시행했다가 적용 시점을 유예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일들이 거듭되면서 경제주체들은 해당 정책의 향방이나 구체적 영향을 가늠하기 어려웠다. 이에 기업은 관세에 대비하여 미리 상품을 구매하고 재고를 쌓아두는 **先수요** 한편 시장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마진 축소를 감내하고 가격 인상을 자제하였다.¹⁾ 이로 인해 미국내 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여 한국의 **對美** 수출도 예상보다는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관세유예, 先수요, 가격인상 자제 현상이 나타나면서 최근까지도 관세정책의 부정적 영향은 뚜렷하지 않았다.**

2. 그러나 최근 주요국^{한국·EU·일본 등}과 미국간 관세협상 합의로 美관세정책이 더욱 구체화되고 의사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잡은 만큼 경제주체들이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서면서 美관세 영향이 점차 확대될 것이다. 금번 합의로 관세율과 관세 적용 시기·범위 등이 큰 틀에서 확정되면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완화되었고, 이에 따라 경제주체들은 美관세정책이 초래할 비용과 기회를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 기조가 단기간내에 되돌려지기는 어렵다는 인식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²⁾. 이에 따라 이제는 각국 정부·기업들이 합의된 관세협상 결과를 외생적 제약조건으로 두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과 전략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기업들은 이제 정해진 세율에 따른 관세 부담을 전제로 가격 책정, 공급망·투자 조정 등 근본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美관세의 영향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3. 금번 美관세정책은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美관세정책이 우리 경제^{성장·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경로별로 분석하고, 관세 변화에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수출의 경우 그 영향을 세부경로별·산업별로 보다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이는 미국 수입기업 - 국내기업의 미국 현지법인도 포함 - 의 행태이다. 여타국 수출기업은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對美수출가격을 인하여 관세 부담을 일부 흡수하였으며, 이에 따라 여타국의 수출·생산 축소는 예상보다 작았다. 자세한 내용은 [FY] 관세의 미국 물가에 대한 영향은 왜 느리게 나타났는가를 참조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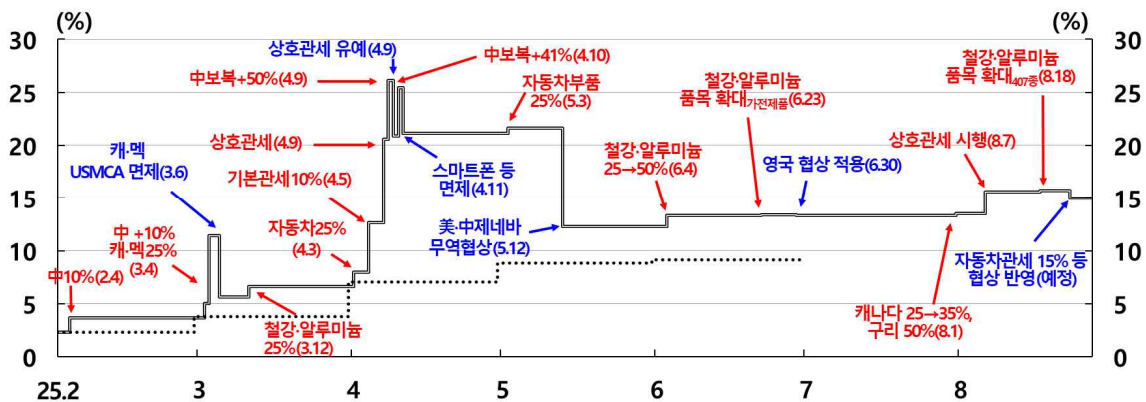
2) 관세정책의 지속성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1] 美관세 충격의 지속성에 따른 경제적 영향 차이를 참조하기 바란다.

II. 美관세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

4.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협상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면서 美관세정책의 전체적인 모습이 보다 명확해졌다. 핵심은 모든 국가에 기본 10%의 관세를 부과하되, 미국과의 양자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 높은 관세율 15~41%을 적용하는 상호관세이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관세³⁾, 중국·캐나다·멕시코를 대상으로 한 펜타닐관세, 관세회피 방지를 위한 40%의 환적관세 등도 美관세정책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최근까지 관세합의 내용을 반영하여 추정한 미국의 평균관세율은 15%^{2024년 금액기준 가중평균}로 1930년대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美신정부 출범 이후 美관세율이 대폭 상승한 가운데 관세정책의 국가별·품목별 구조가 드러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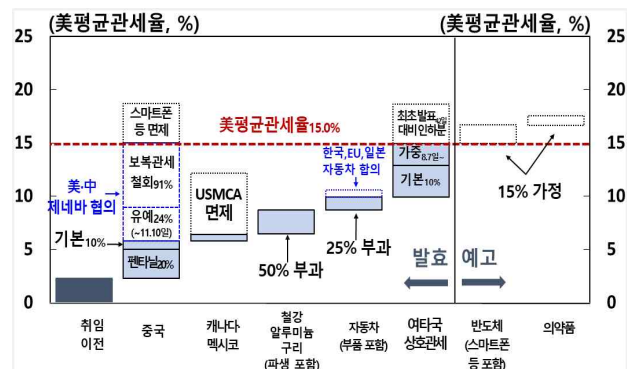
[그림 1] 美평균관세율 전체국가 추이¹⁾



[표 1] 미국 관세정책 구조

구분	관세율
국가별	
상호관세	국가별 10~41% (韓·日·EU 15%)
펜타닐관세 ²⁾	中 20%, 캐 35%, 맥 25%
추가관세	인도 추가 25%, 브라질 추가 40%, 환적 ³⁾ 40%
품목별	
철강·알루미늄·구리 ⁴⁾	50% (英 철강·알루미늄 25%)
자동차·자동차부품	韓·日·EU 15%, 英 10%, 여타국 25%
반도체·의약품	0% (추후 부과 예상)
에너지·희귀광물	0%

[그림 2] 美관세정책별 평균관세율 영향



주: 1) 2024년 미국 수입규모를 기준으로 추정한 평균관세율. 점선은 해당월 관세수입으로 추산한 실효관세율

2) 캐나다·멕시코는 USMCA적용 품목 무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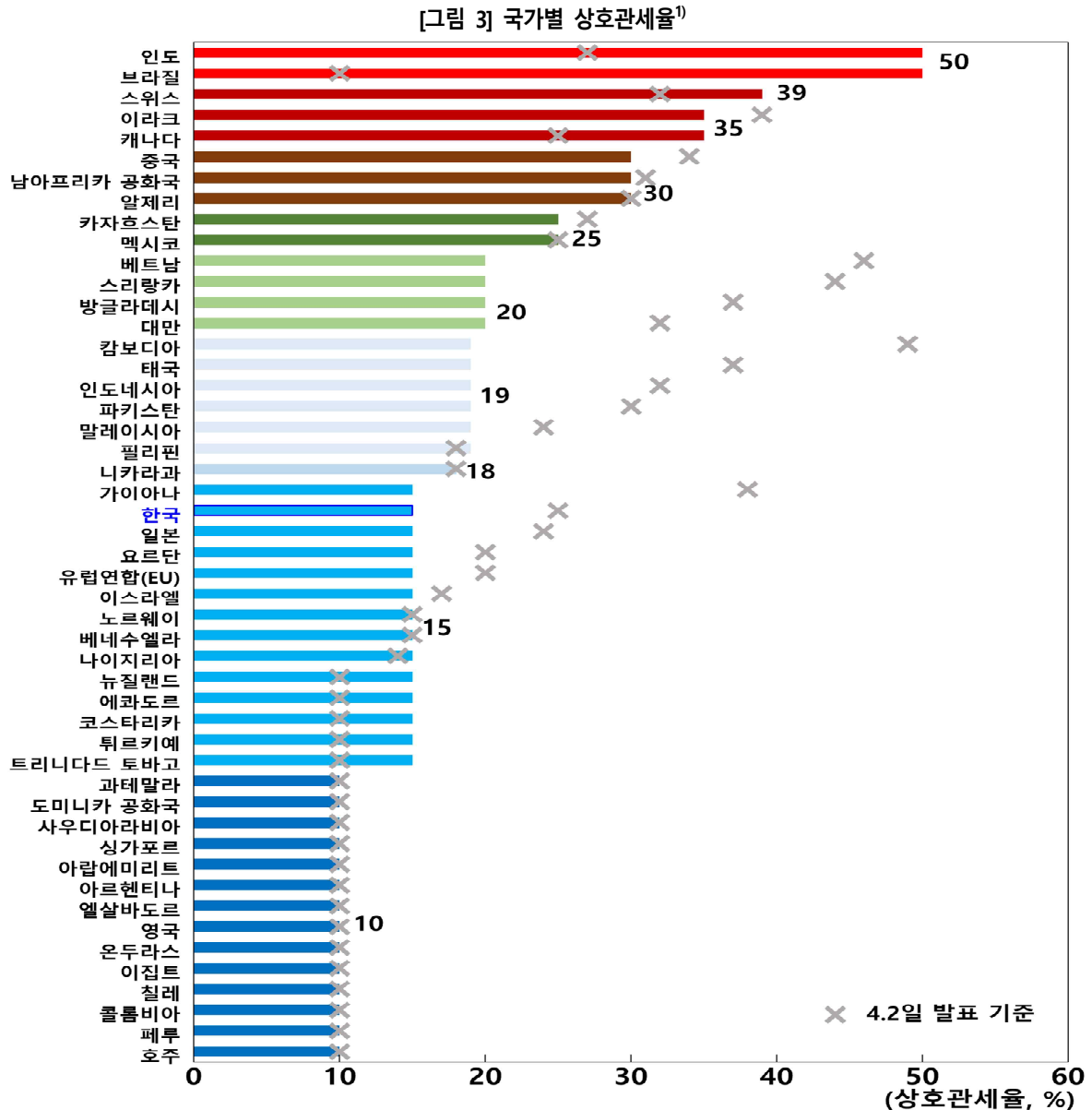
3) 예컨대 특정국이 중국산 제품을 수입·가공 후 미국에 수출할 때 해당국 제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4) 구리광석 등 가공이 덜 된 형태는 무관세

자료: 한국은행

3)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영국(25%)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에 50%가 적용된다. 자동차 관세의 경우 영국 10%, 한국·일본·EU 15%가 적용되며, 나머지 국가에는 25%가 부과된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아직까지는 무관세이나 미국은 EU와 협상에서 향후 부과시 15%를 상한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우리나라와 일본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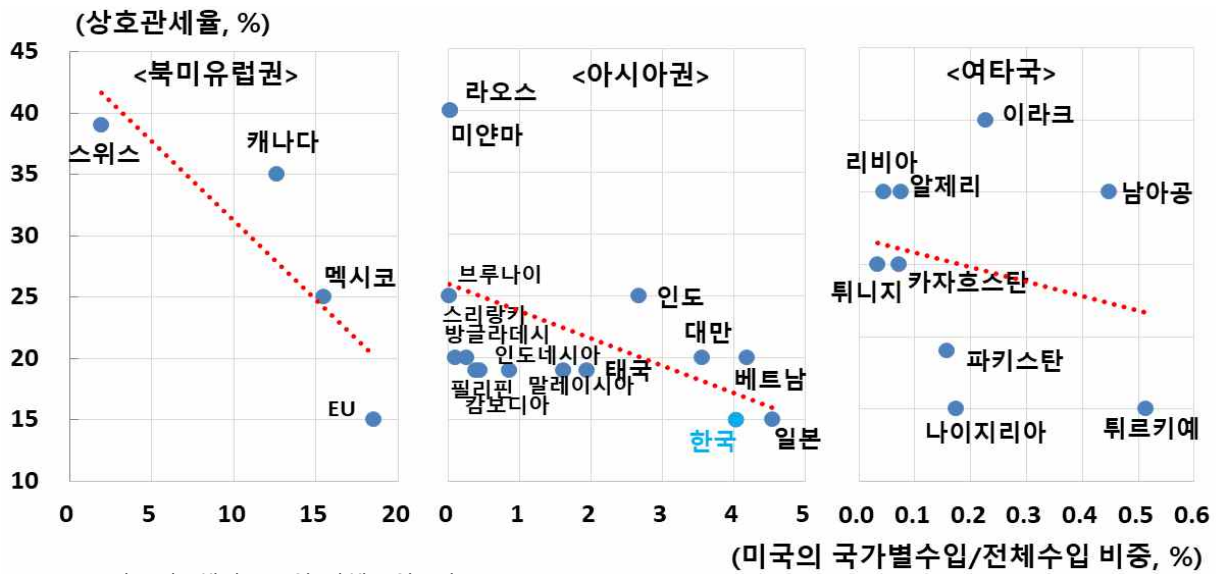
국가별 상호관세율은 관세협상을 거치면서 크게 조정



5. 상호관세는 미국 내 관세인상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미국의 경제적 이해에 따라 국가별로 차등적으로 조정되었다. 한국, EU, 일본은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상호관세를 적용받았는데, 이들 국가는 대체로 미국의 수입의존도가 크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한국, EU, 일본은 자동차에 적용되던 25% 관세도 15%로 낮추는 데 합의하였다. 한편 미국과 경제적 연관도가 매우 높은 인접국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에도 펜타닐 유입 방지 명분으로 헤드라인 관세율은 높지만, 대부분 품목이 USMCA대상 무관세를 적용받아 실질적으로는 낮은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북미·유럽, 아시아, 여타국 등 그룹별로 구분(상호관세 10%가 부과된 對미무역적자국은 제외)해 살펴보면, 해당국에 대한 미국의 수입 비중이 커 관세인상에 따른 미국의 타격이 클수록 그 국가에 적용되는 상호관세율이 낮은 경향이 있다.

미국의 수입의존도가 높을수록 낮은 상호관세율이 부과되는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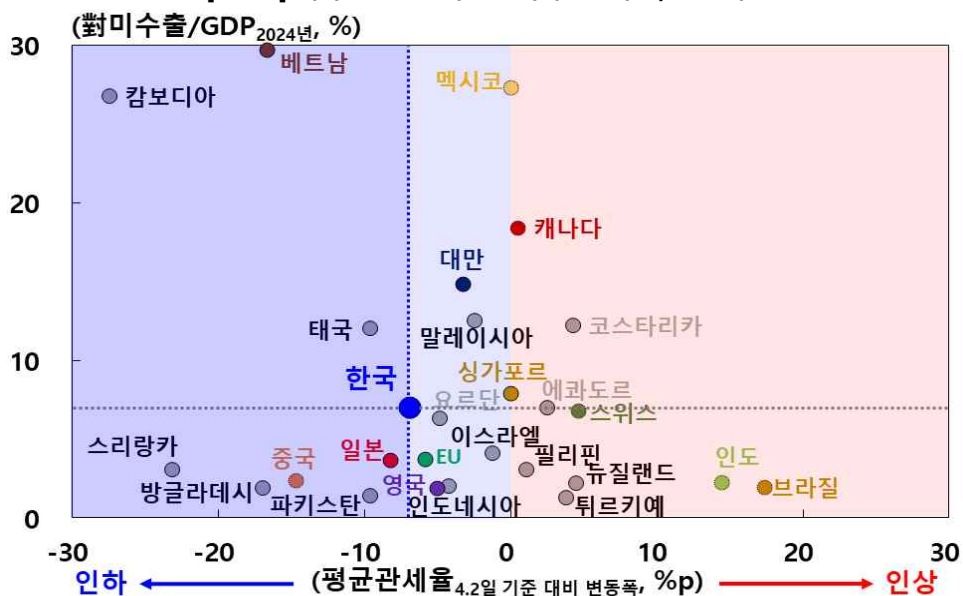
[그림 4] 국가별 상호관세율과 미국의 수입의존도¹⁾ 사이의 관계



6. 주요국과의 관세협상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는 EU, 일본 등과 함께 협상에서는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둔 그룹에 속한다. 4.2일 최초 행정명령 기준 대비 평균 관세율의 인하폭을 비교해 보면, 미국의 수입 상위 50개국 중 한국은 9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우리와 對미 수출의존도가 유사한 스위스, 싱가포르 등과 비교해서도 양호한 편이다.

한국, 일본, EU 등은 협상이 잘 된 편

[그림 5] 국가별 평균관세율 변화와 對미수출/GDP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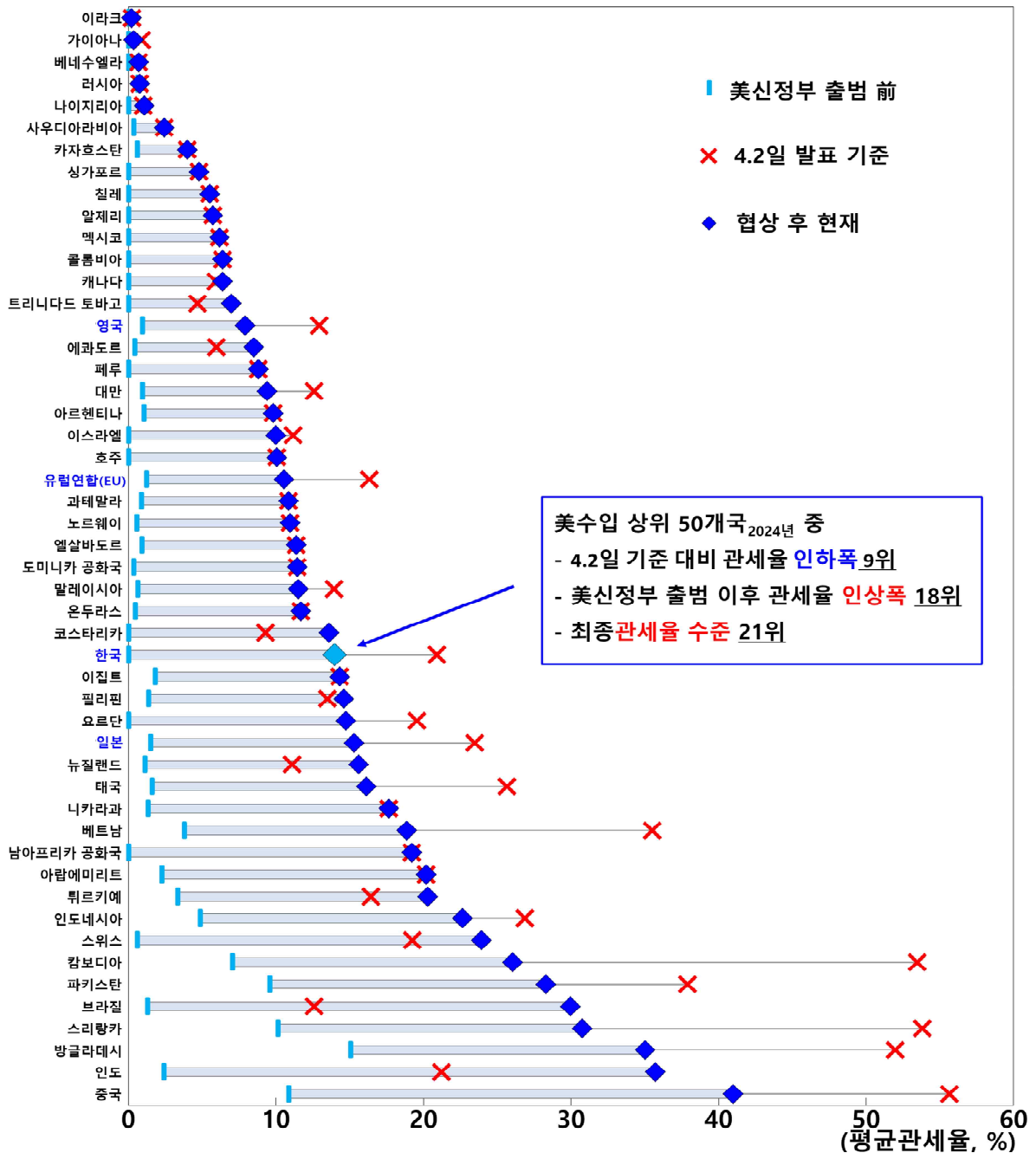


자료: 美백악관, 美연방정부 관보, 美Census, IMF WEO(2025.4), 한국은행

7. 다만 美신정부 출범 이전에 적용되던 평균관세율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관세율 인상폭이 50개국 중 18위로 중상위 그룹에 속해 결과적으로는 관세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⁴⁾ EU,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한미FTA에 따라 기존 관세율이 0%^{EU와} 일본은 각각 1.2%, 1.5%였던 데다 품목관세철강, 자동차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커 인상폭도 컸다.

국가별 평균관세율 변동폭 비교

[그림 6] 국가별 평균관세율¹⁾ 변화



주: 2024년 美수입규모 기준으로 가중평균
 자료: 美백악관, 美연방정부 관보, 美Census, 한국은행

4)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글로벌 기관들의 개괄적인 평가는 [참고4](#) 美관세협상에 대한 주요 기관중양은행·IB 등들의 평가를 참조하기 바란다.

II. 핵심이슈

관세종류별로 국가간 유불리에 차이가 있으며, 한국은 품목관세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 편

[표 2] 美관세 품목별 노출도¹⁾ Top 10 국가²⁾

구 분	순위 (노출도, %)									
	1	2	3	4	5	6	7	8	9	10
상호관세 대상품목	방글라데시 (100)	요르단 (97)	과테말라 (96)	스리랑카 (96)	파키스탄 (96)	엘살바도르 (96)	도미니카 공화국 (94)	캄보디아 (91)	이집트 (91)	뉴질랜드 (90)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 포함	UAE (26)	브라질 (10)	튀르키예 (9)	아르헨티나 (9)	한국 (7)	캐나다 (7)	이집트 (7)	중국 (6)	대만 (5)	인도 (5)
자동차 부품 포함	한국 (36)	일본 (35)	멕시코 (27)	영국 (17)	남아공 (15)	온두라스 (15)	캐나다 (11)	니카라과 (11)	EU (11)	필리핀 (8)
반도체 전자제품 포함	대만 (64)	말레이시아 (44)	필리핀 (33)	태국 (29)	베트남 (29)	이스라엘 (27)	중국 (23)	한국 (13)	멕시코 (12)	코스타리카 (11)
의약품	싱가포르 (35)	스위스 (30)	EU (21)	인도 (14)	영국 (10)	이스라엘 (8)	호주 (8)	노르웨이 (6)	일본 (5)	한국 (3)
에너지·희귀광물	이라크 (99)	가이아나 (98)	베네수엘라 (95)	나이지리아 (93)	카자흐스탄 (86)	알제리 (83)	사우디아 라비아 (83)	러시아 (66)	트리니다드 토바고 (53)	콜롬비아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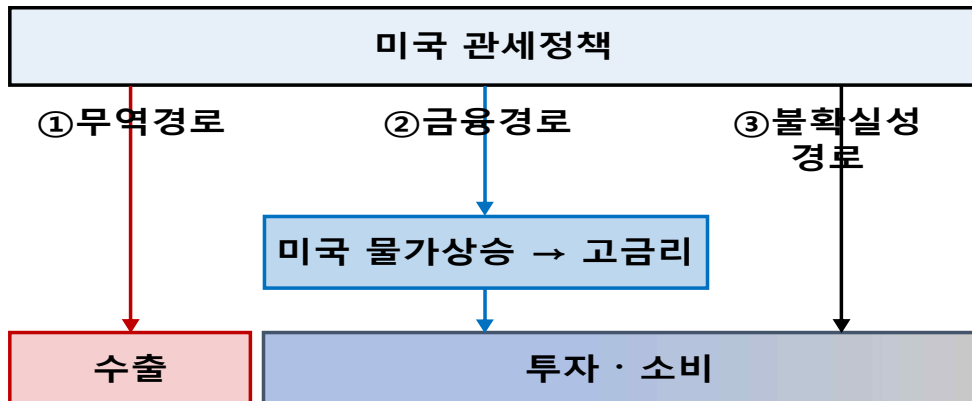
주: 1) ()내는 2024년 각 국가의 對美수출액 중 해당품목 비중 2) 美수입 상위 50개국 대상
 자료: 美백악관, 美연방정부 관보, 美Census, 한국은행

Ⅲ. 美관세정책의 전달경로와 우리경제 영향

8. 미국의 관세 부과로 한국이 부담하는 경제적 영향은 크게 3가지 - ①무역, ②금융, ③불확실성 - 경로를 통해 나타난다. 성장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각 경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미국 관세정책은 무역, 금융, 불확실성 경로를 통해 한국경제에 영향

[그림 7] 美관세의 성장 영향 경로¹⁾



주: 1) 일차적으로 주로 영향을 미치는 지출부문을 표시한 것으로, 이차적으로는 소득, 생산 등을 통해 모든 지출부문에 영향을 미치게 됨
자료: 한국은행

①무역경로는 美관세로 교역이 위축되는 경로이다.⁵⁾ 관세부과국인 미국의 경우 관세가 비용충격으로서 수입에 대해 부담하는 비용이 높아지게 되어 물가가 상승하고 실질 소득이 낮아져 성장이 위축된다.⁶⁾ 한국 등 미국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美관세가 수요충격으로 작용하여 對美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을 둔화시킨다. 아래는 무역경로의 세부경로이다.

①A 미국시장 축소(-): 美관세가 부과되면 먼저 미국으로의 수출 비용이 높아짐에 따라 對美수출이 감소한다. 또한, 관세가 전반적인 수입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미국의 총수요가 줄어드는 데 따라서도 對美수출이 감소하게 된다. 여기서 對美관세가 국가별·품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대가격 차이로 인해 對美수출 감소 정도는 국가별로 달라질 수 있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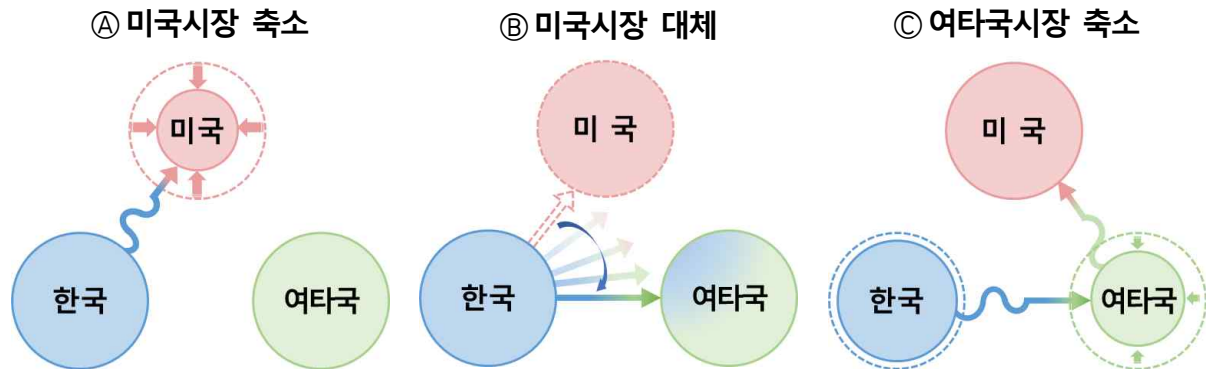
①B 미국시장 대체(+)^{전환수출}: 미국의 국가는 수출 비용이 높아진 미국 대신 서로에 대한 수출을 늘려 관세를 회피하려는 유인이 생긴다. 따라서 기존 對美수출의 일부가 미국의 국가에 대한 수출로 대체된다.

- 5) 무역경로가 직접적으로는 수출과 수입에만 영향을 미치지만 이차적으로는 소비와 투자에도 영향을 미친다. 美관세로 미래 경제상황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소비자와 생산자들은 소비와 투자를 줄이게 되며, 그렇지 않더라도 실제 기업 실적이 나빠지게 되면 임금과 이윤이 축소되어 소비와 투자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 6) 다만 미국 정부는 막대한 관세 수입을 얻게 되며 이를 지출 또는 감세에 사용하여 관세에 따른 수요 둔화를 완화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대규모 감세·재정개혁 패키지를 법제화(OBBBA)하였다. 그러나 이는 물가에는 추가적인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 7) 미·중이 서로에게 관세와 보복관세를 거듭 부과하면서 통상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았던 4월 중순에는 한국이 중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며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여타국시장 축소(-)**: 미국외 국가들은 對미수출이 위축되고 하술할 금융 및 불확실성 경로를 통해 소비, 투자도 위축되므로 시장이 축소된다. 여기에는 해당국 소비와 투자를 위한 수입뿐 아니라 미국 등 다른 국가로의 수출을 위해 필요한 중간재 수입도 포함되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는 타격이 클 수 있다.⁸⁾

미국외 국가는 美관세로 미국시장이 축소되면 이를 서로의 시장으로 대체하려 하지만 각국의 시장도 축소

[그림 8] 美관세의 무역경로 영향



자료: 한국은행

9. 한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은 여타국의 전환수출이 한국에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특히 對미수출 비중이 크고 미국과의 무역긴장이 심화된 중국은 이미 과잉공급 문제도 안고 있어 관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미국외 국가로의 수출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전환수출의 대상국은 보다 저렴한 재화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압력이 낮아진다.⁹⁾ 그러나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경쟁에 밀려 점차 위축될 경우 성장에는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게 된다.

10. ②금융경로는 美관세로 인한 미국의 물가상승압력이 美통화정책에 영향을 주고, 이에 따라 금융여건 완화가 지연됨에 따라 실물경제가 영향받는 경로이다.

미국의 관세정책은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높이게 되고 이는 미국의 정책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요인이 된다. 이로 인해 글로벌 금융여건의 완화가 더뎌지면 미국뿐 아니라 미국외 국가에서도 소비·투자가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 환율이나 주가 등 자산가격이 영향받는 경로도 있을 수 있다. 미국의 고금리 지속에 따른 달러화 강세 및 글로벌 주가 하락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성장과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8) 교역은 글로벌 공급망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對미 수출이 줄어들게 되면 이를 위해 수입하던 타국의 중간재에 대한 수요도 축소된다. 예를 들어, 중국의 IT기기에 우리 반도체 등 중간재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중국의 IT기기 수출이 줄어들면 우리의 관련 對중 수출도 줄어들게 된다. 또 중국의 경우 트럼프 1기 이후 우회수출을 통해 높아진 對미 관세에 대응하였는데, 우회로로 삼았던 아세안, 멕시코 등이 높은 관세를 맞게 되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9) 보다 자세한 논의는 [참고2](#) 중국의 수출시장 전환(redirection)이 우리나라 對중 수입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참조하기 바란다.

11. ㉠불확실성경로는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투자와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로이다. 이는 관세 그 자체의 영향은 아니지만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불가피하게 수반되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美관세 영향의 하나이다.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기업은 투자 시점을 미루거나 축소하고,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예비적 저축을 늘리는 행태를 강화한다. 더욱이, 관세정책과 관련한 우려가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하고 위험 프리미엄을 높인다면 기업·가계의 차입여건이 악화되어 경제활동이 제약될 수 있다. 다만 의사결정 지연이 관세의 부정적 영향을 잠시 지연시키는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가격인상 결정을 미뤄 물가가 더디게 오르면서 최근까지도 미국내 소비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따라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오히려 관세의 영향이 더 뚜렷해지는 효과도 있다.

12. 물가의 경우, 美관세는 교역감소, 원자재가격 하락 등 수요측 하방요인과 공급망 훼손, 통화 가치 하락 등 공급측 상방요인으로 동시에 작용하므로 영향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인플레이션 축소(-): 관세는 글로벌 경제활동과 수요를 위축시켜 교역상대국 경제의 초과공급을 초래하는 한편, 국제 원자재가격도 하락시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아울러 對美 수출이 감소한 나라들이 여타국으로 수출전환을 시도할 경우 대체수요를 찾기 위해 기업들은 제품가격을 낮추게 되며, 이는 교역상대국의 수입물가 하락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를 일으킨다.

인플레이션 확대(+): 반대로 관세는 공급망교란을 일으켜 공급병목 발생시 가격 급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과정에서 생산성이 낮아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관세가 교역상대국의 통화 가치를 절하시킬 경우 자국통화 표시 수입품의 가격 상승을 유발해 소비자물가를 높일 수 있다.

13. 우리나라는 美관세 주요 당사국과의 높은 무역연관성¹⁰⁾ 등을 감안할 때 美관세가 수요측 마이너스 충격으로 작용하며 인플레이션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¹¹⁾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상반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美관세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은 국가별 관세율은 물론, 주요국과의 무역의존도, 글로벌 공급망내 역할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다. 주요국이 美관세에 보복관세로 대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관세는 주로 수요측 하방압력으로 작용해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년 물가 전망을 하향조정하는 등 인플레이션 축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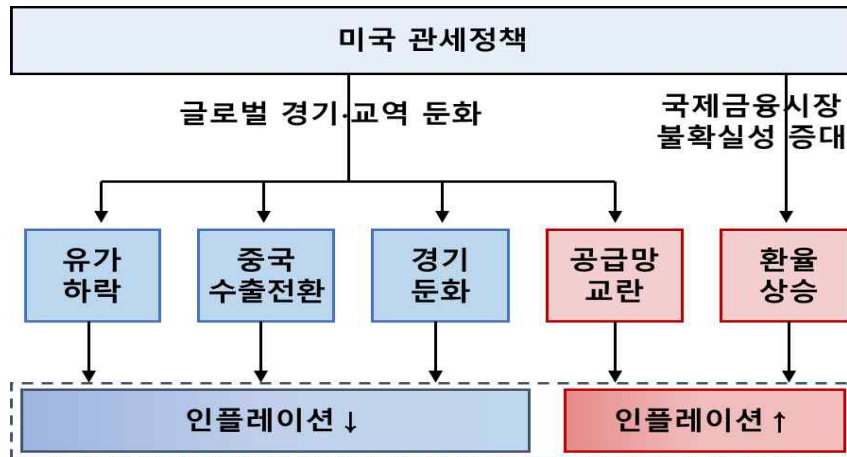
10) 우리나라는 관세협상의 양대 축인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각각 18.7%, 19.5%)이 높을 뿐 아니라, 유로지역(10.9%), 일본(4.3%), ASEAN(16.7%), 멕시코(2.0%), 캐나다(1.5%) 등 관세 영향이 큰 주요국과의 무역 연관성도 높다.(24년 기준)

11) 자세한 내용은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25.6월)」 BOX C “최근 주요국 물가상향과 미국 관세정책의 향후 물가 파급영향 점검”을 참조하기 바란다.

12) 주요국 중앙은행의 2025년 인플레이션 전망(25.1월 → 7월)은 유로지역 2.4% → 2.0%, 영국 3.4% → 3.4%, 캐나다 2.3% → 1.8%로 대체로 유지 또는 하향조정되는 추세이다.

물가는 상·하방압력이 공존하나, 수요측 하방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

[그림 9] 美관세의 물가 영향 경로



자료: 한국은행

우리경제 영향

14. 美관세정책은 관세부과가 없었을 경우 대비 국내 성장률을 올해 $\Delta 0.45\%p$, 내년 $\Delta 0.60\%p$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별로 살펴보면, 성장에서는 무역경로가 올해와 내년 모두 성장률 하향조정의 약 1/2을 설명하여 美관세 영향의 주된 경로로 분석되었고, 금융경로와 불확실성 경로가 약 1/4씩을 설명하여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또한 美관세는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금년중 $\Delta 0.15\%p$ 낮추고, 美관세의 글로벌 수요 감소 효과가 확대되고 국제유가 하락세도 이어지며 내년에는 $\Delta 0.25\%p$ 하락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美관세의 국내경제 영향¹⁾>

	(전년대비, %p)	
	2025 ^{e)}	2026 ^{e)}
GDP 성장률	-0.45	-0.60
• 무역경로	-0.23	-0.34
• 금융경로	-0.09	-0.10
• 불확실성경로	-0.13	-0.16
소비자물가 상승률	-0.15	-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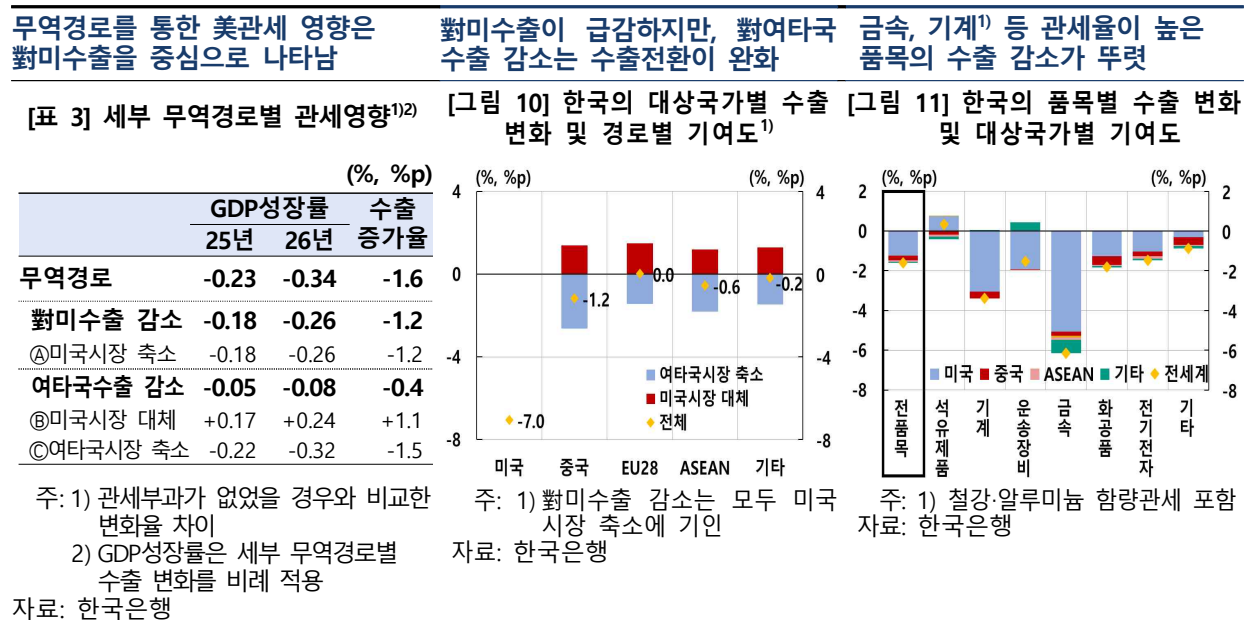
주: 1) 관세부과가 없었을 경우와 비교한 변화율 차이

자료: 한국은행

15. 경로별 성장영향을 살펴보면, ❶무역경로를 통해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각 $\Delta 0.23\%p$, $\Delta 0.34\%p$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¹³⁾ 내년에는 수출 둔화폭이 확대되며 마이너스 성장 효과가 커지는데, 이는 더디게 나타나던 관세영향이 앞으로 가시화되는 데다 내년부터 품목관세반도체·의약품가 추가 부과될 것으로 전제하였기 때문이다.

16. 한국 수출에 대한 美관세 영향은 對미수출을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중국 등 여타국에 대한 수출도 소폭 줄어들었다. 글로벌 투입산출표를 이용한 일반균형모형¹⁴⁾에 따르면, 관세부과 전과 비교했을 때 對미수출은 $\Delta 7.0\%$ 감소하여 전체수출 감소폭 $\Delta 1.6\%$ 에서 $\Delta 1.2\%p$ 를 기여하였다. 對여타국 수출은 중국을 중심으로 $\Delta 0.5\%$ 줄어 전체수출 감소폭 $\Delta 1.6\%$ 에서 $\Delta 0.4\%p$ 를 기여하였다. 이처럼 EU 등 對여타국 수출 감소폭이 비교적 작게 나타난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해당국 수요가 위축되지만, 전환수출이 늘어나면서 여타국시장 축소의 영향을 완화하기 때문이다.

17. 품목별 수출 영향을 살펴보면, 고율 관세 대상인 철강·알루미늄, 그리고 對미 수출 비중이 큰 기계류, 자동차·부품이 큰 영향을 받으며, 한국의 주력수출품인 반도체도 일정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 관세가 높은 금속·철강·알루미늄 포함과 수출에서 미국向 비중이 큰 기계, 운송장비·자동차 포함 등이 對미수출을 중심으로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대부분의 품목이 미국시장 축소의 영향을 크게 받아 감소하였으며, 對중수출 비중이 큰 전기전자·반도체 포함과 화공품의 경우에는 중국시장 축소의 영향을 다른 품목에 비해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이는 기본적으로 모형분석 결과를 활용하되, 모형에서 고려되기 어려운 기업들의 조기선적, 재고활용 등을 통한 단기적 충격 완화 움직임과 협상상황을 고려한 가격전가 지연 등을 감안한 판단을 반영한 것이다.

14) 교역비용(trade cost) 변화로 표시되는 교역충격이 국가간 산업연관구조를 통해 각국 산업의 교역 및 생산에 파급되는 영향을 분석하는 Antràs-Chor모형을 이용하였다. 모형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Antràs and Chor(2018) "On the Measurement of Upstreamness and Downstreamness in Global Value Chains"와 BOK 이슈노트 제2023-36호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의 배경과 영향」의 BOX3을 참조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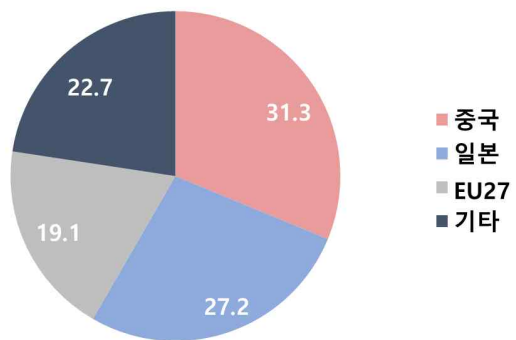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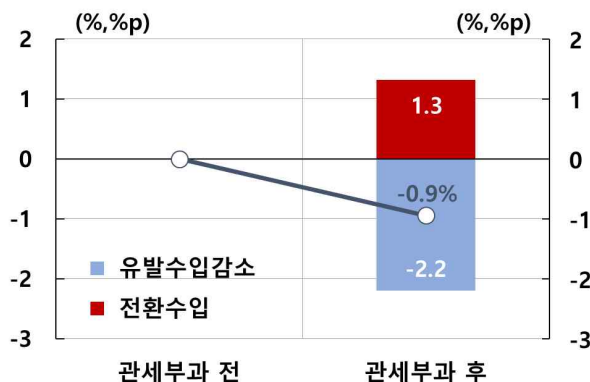
18. 우리나라 수입의 경우 중국, 일본 등이 美관세에 대응해 한국으로의 수출 전환수출을 확대함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전환수입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균형모형 추정결과 수입은 관세부과 전에 비해 $\Delta 0.9\%$ 감소하였으며, 對美수입이 전체수입 감소폭 $\Delta 0.9\%$ 에서 $\Delta 0.6\%p$ 를 기여하였다. 그 외 국가는 전체수입 감소폭 $\Delta 0.9\%$ 에서 $\Delta 0.3\%p$ 를 기여함으로써 수입 감소폭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타 국가들이 美관세에 대응하여 여타국으로 수출 전환수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수입 전환수입도 일정하게 증가 $+1.3\%$ 함에 따라 美관세로 인해 유발되는 수입 감소분 $\Delta 1.6\%$ 을 일부 상쇄하기 때문이다. 美관세 부과시 한국의 수입 변화에 대한 경로별 기여도를 보면, 전체수입 감소폭 $\Delta 0.9\%$ 중 관세로 인해 유발되는 수입 감소분은 $\Delta 2.2\%p$, 전환수입 증가분이 $+1.3\%p$ 로 각각 나타났다. 이러한 전환수입의 국가별 비중을 보면 중국과 일본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¹⁵⁾.

한국 수입, 美관세로 감소하지만 전환수입도 상당

전환수입은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증가

[그림 12] 한국 수입 변화¹⁾ 및 경로별 기여도 분해²⁾

[그림 13] 한국 전환수입의 국가별 비중



주: 1) 관세부과가 없었을 경우와 비교한 변화율 차이

2) 수출·내수 위축에 따른 유발수입 감소와 전환수입(여타국의 對한국 전환수출)으로 분해

자료: 한국은행

주: 1) 전세계 對한국 전환수출 중 해당국 비중

자료: 한국은행

19. ②금융경로를 통해서도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내수를 중심으로 각각 $\Delta 0.09\%p$, $\Delta 0.10\%p$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번 관세인상이 항구적 충격으로 작용하여 물가상승과 금융여건 완화 지연으로 파급¹⁶⁾되면서 내년까지도 금융경로를 통한 성장의 하방압력이 이어지게 된다. 이처럼 관세충격의 지속성이 높은 경우에는 금융경로를 통한 파급효과가 일시적인 경우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¹⁷⁾ 지난 4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와 주요국의 보복 대응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것 또한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¹⁸⁾이다.

15) 중국의 수출전환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중 수입 증가 규모에 대한 다른 방식의 추정은 [참고2](#) 중국의 수출시장 전환(redirection)이 우리나라 대중 수입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참조하기 바란다.

16) 실제 올해 관세 영향으로 美연준 금리인하 속도가 더뎠고 글로벌 금융여건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

17)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1](#) 美관세충격의 지속성에 따른 경제적 영향 차이를 참조하기 바란다.

18) 2025.4월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상호관세를 발표('해방의 날')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크게 높아진 후 진정되었다. Fed Notes(2025), Jurado et al.(2015) 등은 VIX지수 급등에 따른 충격이 기업투자 및 산업생산에 유의미한 하락을 초래함을 분석하였다.

20. ㉔불확실성 경로를 통한 美관세의 국내성장 영향은 올해 $\Delta 0.13\%p$, 내년 $\Delta 0.16\%p$ 로 추정_{DSGE}되었다.¹⁹⁾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은 실제 관세부과와 별도로 미국의 관세 발표·변복, 협상 난항·진전 등으로 크게 변해왔다. 美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_{TPU}는 올해 2/4분기에 역사적 수준까지 높아졌다가 이후 미국과 다수 국가의 관세협약이 완료되며 다소 완화되었는데, 이러한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 활동 지연은 올해뿐 아니라 내년까지 시차를 두고 성장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한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관세와 협상이 진행중인 국가_{중국·캐나다·멕시코} 등과의 협상 전개 양상 등에 따라 불확실성의 크기와 그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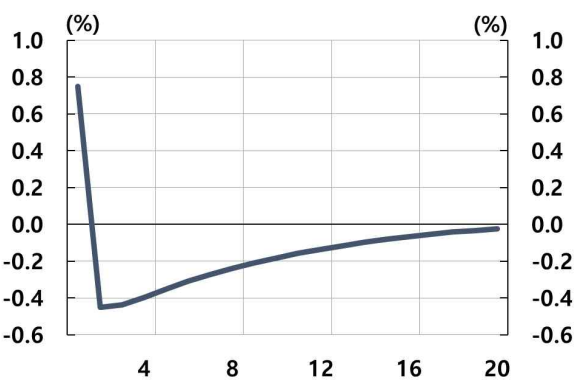
무역정책 불확실성은 매우 높은 수준에서 최근 일부 완화 불확실성경로 영향은 내년에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그림 14]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_{TPU}¹⁾



주: 1) 마지막 관측치는 25.7월
자료: Baker et al.(2016)

[그림 15] 불확실성 충격에 따른 우리 GDP 반응¹⁾



주: 1) 정상상태 대비(%)
자료: 한국은행

19) 불확실성 충격 분석방법 및 결과, 시나리오 분석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9월 발간될 이슈노트 2025-23호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우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참고하기 바란다.

세계경제와의 비교

21. 이하에서는 주요국간 비교가 용이한 GEM모형을 활용하여 美관세충격에 따른 국가별 성장·물가 영향을 살펴보았다²⁰⁾. 우선 관세인상 당사국인 미국경제는 단기적^{25~26년}으로 고물가로 인한 성장둔화 압력^{stagflationary}에 직면한다. 25~26년중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베이스라인^{관세 미시행 가정} 대비 평균 0.3%p 상승하고 GDP성장률은 0.5%p 하락한다. 이는 수입비용 상승이 물가를 높여 실질소득이 낮아지고 소비와 투자를 둔화시키는 메커니즘에 기인한다. 중기적^{27년 이후}으로는 관세로 인한 비용충격이 사라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안정²¹⁾되고 GDP는 기존 성장경로로 수렴한다. 소비와 투자가 기존 경로로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지만, 높아진 관세 부담으로 수입이 줄어들면서 미국내 생산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역수지 적자 자체가 해소되지는 않는다.

22. 여타국 경제는 통상여건 악화가 교역과 투자를 제약하며 성장과 물가 모두 둔화압력에 노출된다. 세계교역 신장률은 항구적으로 1.4%p 하락하고 투자가 위축되면서 글로벌 GDP는 기존 성장경로로 회복하지 못한다. 이는 미국 성장세가 정상화되는 것과 대조적인 것으로, 美관세정책이 전세계를 상대로 한 근린공핍화정책(Beggar-thy-neighbor policy)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23. 우리 경제는 美관세에 따른 타격이 큰 편에 속한다. 앞서 살펴본 대로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낮은 상호관세율을 적용받고 對미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낮추었다. 그러나 높은 수출 의존도로 인해 직접적인 對미수출뿐 아니라 여타국으로의 중간재 수출도 영향을 받으면서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과 공급망 연계가 밀접한 캐나다·멕시코, 우리와 마찬가지로 對미수출 의존도가 높은 아세안, 고율의 관세를 부과받은 중국도 성장 둔화폭이 크다.** 일본과 EU의 경우 내수비중이 큰 데다 관세합의로 비교적 낮은 관세율이 부과되면서 성장 둔화폭이 제한적인 편이다.

20) 모형은 올해 상반기 중 조기선적 효과, 기업들이 재고 소진 및 마진 축소로 가격전가를 미루어 온 행태, 소비자들의 선수요 등 관세인상에 대비하여 실제로 나타난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관세의 단기적 영향은 25년과 26년을 하나의 기간으로 묶어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27~29년의 중기 시계에서도 공급망 재배치 효과, 각국이 관세협상에서 반대급부로 제공한 對미 투자 및 수입 확대 영향 등은 반영되지 않았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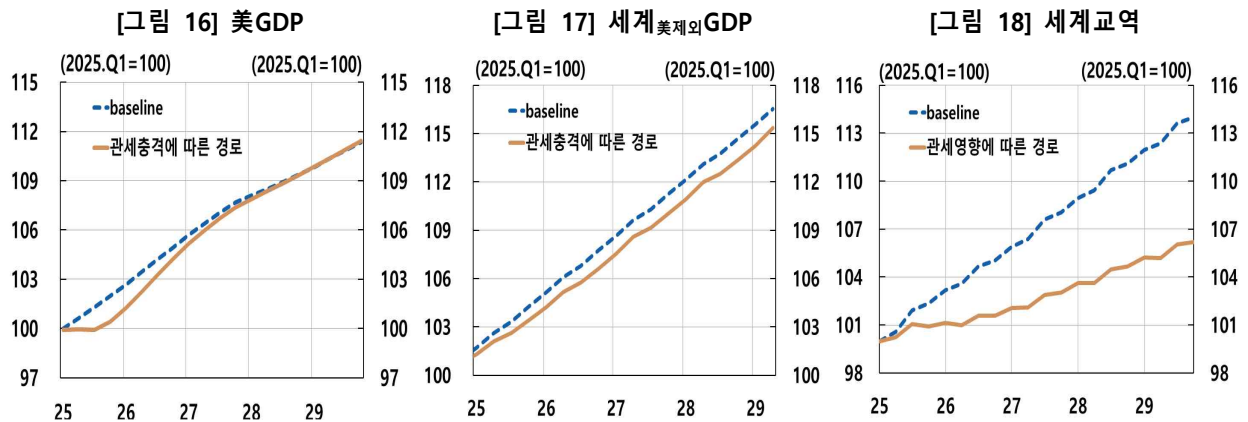
21) 물가 측면에서 관세는 세율이 계속해서 인상되지 않는 한, 부과 첫 해에만 물가상승률을 높이고 이듬해부터는 그 영향이 소멸되는 가격수준 효과이다(Goldman Sachs, 24.7월).

GEM모형에 따른 美관세정책 영향 추정 결과

[표 4] 주요국 성장 및 물가 영향

(%p)	성장				물가			
	2025	2026	2025-2026 ¹⁾	2027-2029 ¹⁾	2025	2026	2025-2026 ¹⁾	2027-2029 ¹⁾
세계(미국제외)	-0.3	-0.6	-0.4	-0.1	-0.3	-0.6	-0.4	-0.1
미국	-0.9	-0.1	-0.5	+0.4	+0.6	—	+0.3	-0.1
유로지역	-0.2	-0.6	-0.4	-0.1	-0.2	-0.4	-0.3	-0.1
중국	-0.5	-0.7	-0.6	-0.2	+0.2	-0.4	-0.1	—
일본	-0.2	-0.4	-0.3	-0.1	-0.1	-0.4	-0.3	-0.2
아세안5	-0.3	-0.8	-0.5	-0.2	-0.1	-0.4	-0.3	-0.3
캐나다	-0.6	-1.1	-0.8	+0.2	+0.4	-0.2	+0.1	-0.1
멕시코	-0.5	-0.8	-0.6	+0.1	-0.1	-0.4	-0.2	-0.4

주: 1) 해당 연도 평균



[그림 19] 對美수출/GDP vs 성장 영향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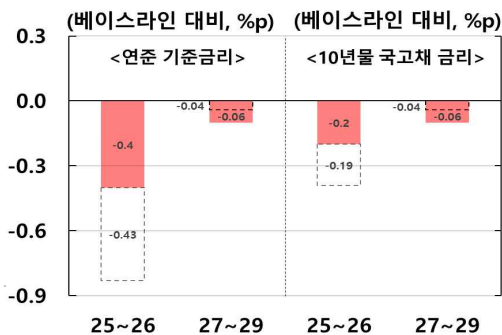
주: 1) 평균관세율이 높을수록 원이 커짐

자료: 한국은행

24. 美관세의 영향을 무역경로와 금융경로로 나눠보면, 무역경로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금융경로도 작지 않다. 모형 추정결과, 관세충격으로 미국의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모두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만약 연준이 물가를 고려하지 않고 경기둔화에만 대응하였을 경우 낮추었을 금리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그런 의미에서 관세충격 이후 예상되는 금리 여건은 상대적인 의미에서 긴축적이라 볼 수 있다. 아울러 주가 약세와 함께 달러화 절상 압력이 발생하게 된다.²²⁾ 이러한 긴축적인 글로벌 금융여건으로 인해 관세충격 이후 국가별 성장세 둔화의 약 1/3~1/4 정도가 금융경로에 기인하여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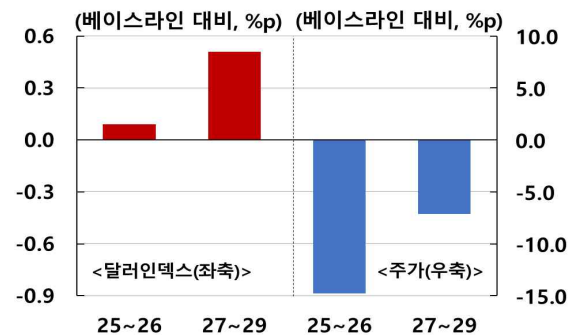
GEM모형 추정 결과 : 국제금융시장

[그림 20] 미국 금리(연준, 시장)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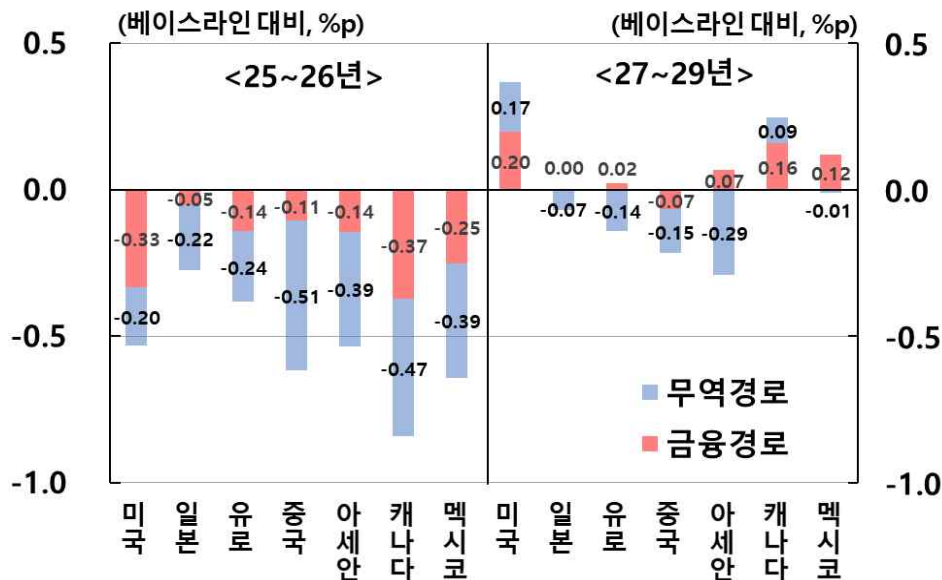


주: 1) 점선은 연준이 물가를 고려하지 않고 성장둔화에만 대응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그림 21] 달러화 및 주가 영향



[그림 22] 국가별 금융경로 VS 무역경로 분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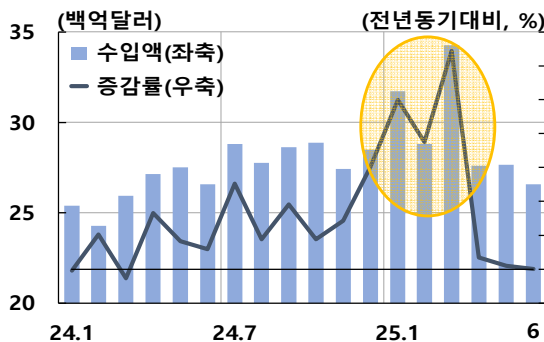
22) 물론 이는 다른 모든 경우가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성립한다. 현실에서는 다른 영향도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관세 부과 후에도 주가가 오르고 미달러화가 절하되는 반대 방향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관세 영향은 점차 가시화 전망

25. 관세부과 후 실제 美관세 영향은 당초 우려에 비해 작게 나타났다. 1/4분기에는 관세 부과전 선수요 효과로 미국의 수입 - 미국의 국가의 對美수출 - 이 크게 늘어났다가 2/4분기에는 크게 줄어드는 등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주요국의 전체 수출은 수출전환 등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중국**은 상반기중 수출이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며, 같은 기간 GDP도 5.3% 성장하였다. 물론 4월 이후 중국의 對美 수출은 큰 폭의 감소(25.4~7월 -23.3%로 전환²³⁾하였으나, 동시에 EU, ASEAN 등 여타국으로의 수출이 확대되면서 전체 수출은 양호하였다. **미국**의 경우 국내외 기업들이 관세부담을 분담하면서 제한적으로 물가에 전가되어 소비자물가는 예상보다 안정적이었으며, 따라서 소비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크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 對美수출 의존도가 큰 자동차가 기업의 가격인상 자제와 적극적인 프로모션으로 오히려 미국시장 내 점유율을 높이면서 전기차 현지생산 증대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판매 흐름을 지속하였다.

1/4분기중 재고 축적을 위한 美수입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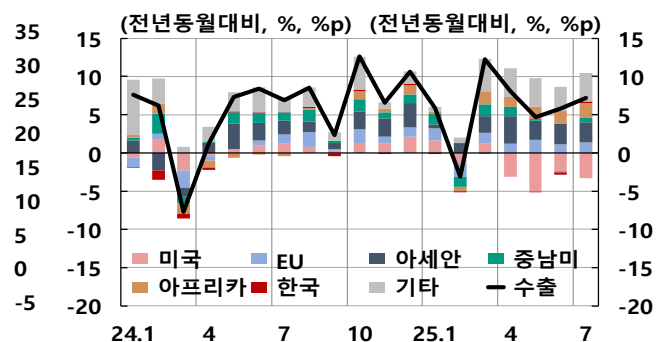
[그림 23] 관세 전후 미국수입



자료: US Census Bureau

중국 전체 수출은 미국向 급감에도 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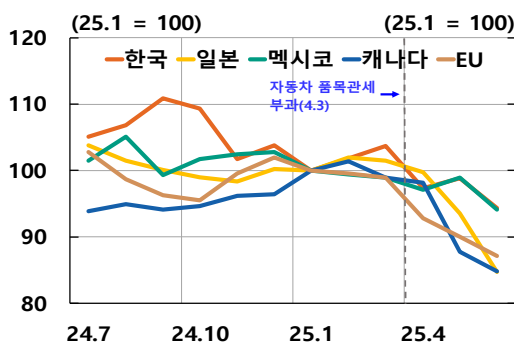
[그림 24] 중국 수출 국가별 기여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미국내 완성차기업의 가격인하로 관세충격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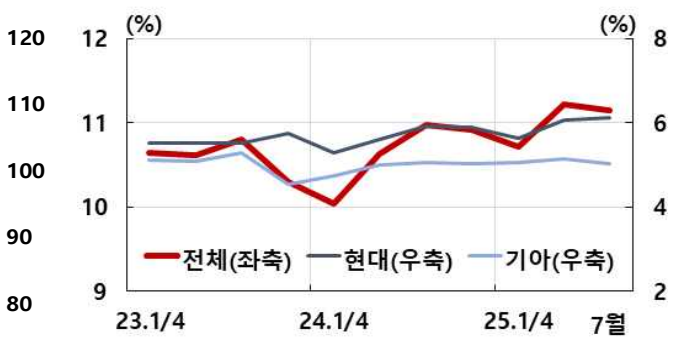
[그림 25] 미국 완성차 수입가격¹⁾



주: 1) 국가별 대당 수입단가
자료: USITC, 자체추정

국내완성차업체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최근 상승중

[그림 26] 국내완성차업체의 미국시장 점유율¹⁾



주: 1) 판매대수 기준
자료: 각사 발표자료

23) 관세유예 조치로 현재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각각 40%미 → 중, 트럼프2기이전 10% + 펜타닐 20% + 기본 10% 30%중 → 미, 트럼프2기이전 20%(PIE 기준) + 보복관세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6. 그러나 최근에는 예상대로 美관세의 영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 소비자들은 물가는 관세가 점차 전가되면서 상승세가 확대(근원물가: 6월 +0.2% → 7월 +0.3% 되고 있다. 실제로 운동용품²⁴⁾ 대비 7월 +1.8%, 자동차부품 +1.5%, 가구 +1.3% 등 주로 관세부담이 큰 품목²⁴⁾의 가격 오름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외 국가**에도 美관세의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의 수입은 1/4분기중 조기선적 영향 이후 부진하며, 이로 인해 주요국 산업생산도 둔화되고 있다. 글로벌 제조업 신규수출주문 PMI도 4월부터 수축국면으로 돌아선 상태다. **한국**의 경우 對美 철강·자동차부품 수출을 중심으로 관세 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²⁵⁾ 자동차 수출은 미국내 판매 호조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관세로 미국내 자동차 시장 환경이 악화되면서 관세 영향이 점차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²⁶⁾ 국내 물가는 美관세 관련 불확실성 등에 따른 국내경기 부진이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글로벌 원자재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최근 기상여건 악화 등에도 불구하고 2% 내외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 수입가격에는 관세 영향 이미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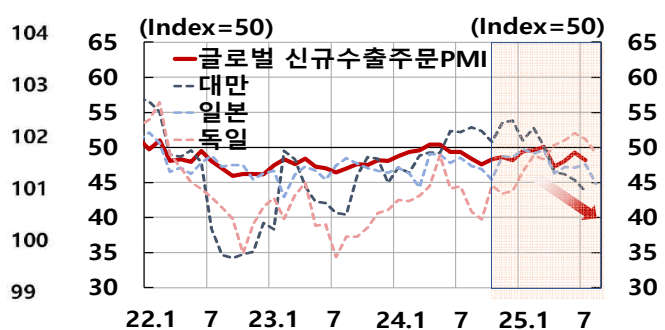
[그림 27] 미국 국산 및 수입품 소매가격



자료: Pricing Lab

美관세 영향이 글로벌 제조업 중심으로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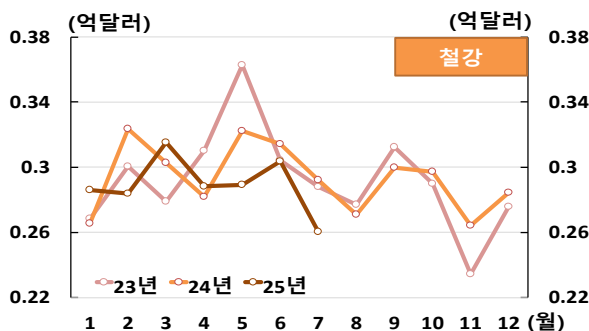
[그림 28] 글로벌 제조업 PMI



자료: S&P Glob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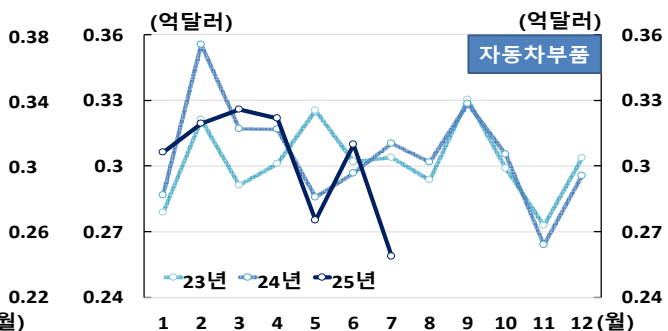
한국은 對美 철강, 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美관세 영향 확대

[그림 29] 對美 철강 수출¹⁾



주: 1) 일평균 기준

[그림 30] 對美 자동차부품 수출¹⁾



자료: 관세청

24) 품목별 실효관세율 상승폭(2월 대비 5월)은 소비재 평균 8.7%p, 여가용품(운동용품 등) 19.3%p, 자동차 및 부품 14.9%p, 가구 9.1%p 등으로 추정된다.

25) 특히 철강·금속(현재 관세율 50%)은 25.3월 관세 시행 후 약 3~4개월인 계약·출하간 시차가 지난 5월경부터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일평균, 5월 -10.3% → 6월 -3.4% → 7월 -10.9%) 이에 더해 자동차 부품(25.5월 시행)도 5~7월중 전년동기대비 감소(일평균 -6.1%)하면서 관세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6) 자세한 내용은 [참고3](#) 관세부과시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의 경쟁력 변화를 참조하기 바란다.

27. 이러한 판단은 현재 전제된 미국의 관세정책이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미·중 협상의 전개, 여타국의 추가적인 대응,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며 이러한 리스크요인의 변화에 따라 美관세의 영향도 달라질 것이다.** 미·중간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며 첨예한 갈등상황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갈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미국에 대한 관세 인상 등을 통해 보복을 감행한 국가가 일부 있으며 미국을 대체하는 시장 발굴 등을 통해 美관세 영향을 회피하려는 움직임도 관측되고 있다. 미국이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²⁷⁾

IV. 시사점

28. **美관세정책은 앞서 분석한 단기적인 시계에서의 경제 영향뿐 아니라 글로벌 무역 질서, 나아가 국내외 정치·경제, 산업구조의 변화까지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과거 미국으로 향하던 여타국의 수출품이 국내 경제로 대규모로 수출전환될 경우에는 국내 산업생태계에 커다란 교란요인이 될 것이어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美관세와 더불어 논의되고 있는 對미투자펀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서 대응하여야 한다. 아직은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크지만 관세에 따른 현지투자 확대 흐름과 함께 맞물려 국내산업의 공동화를 야기할 위험이 있으며, 그 결과 고용이 위축되고 인재 유출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

29. 돌이켜 보면 대내외 여건이 우리 경제에 양호하였던 시기는 거의 없었다. **과거 위기시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 정부 그리고 가계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노후화된 경제구조를 혁신하며 글로벌 교역질서 변화 속에서 기회요인을 기민하게 찾아 대응해 나간다면, 금번 충격을 다시 한번 성공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7) 美경제자문위원장인 스티븐 미란은 지난해 11월 발간한 보고서(일명 미란 보고서)에서 미국의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 관세율이 20%라는 연구결과를 인용하였는데, 이 수치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 미국의 평균관세율(15%, 8.18일 기준) 대비 추가 5%p의 인상 여지가 있다. 이는 반도체·의약품에 대해 25%의 관세율을 부과하거나, 對중국 관세를 40%p 남짓 더 올리는 것에 상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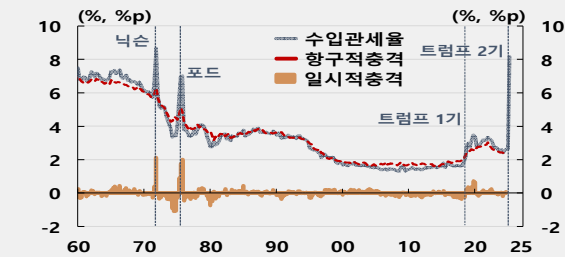
참고 1 美관세충격의 지속성에 따른 경제적 영향 차이

미국의 수입관세율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기초적으로 하락하였으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처럼 과거에도 큰 폭의 인상이 단행된 사례들이 있었다²⁸⁾[그림 1]. 1971년 8월 닉슨 대통령은 달러화 평가절하를 유도하기 위한 협상카드로 수입상품에 10% 관세를 부과했으나 달러약세 달성 후 4개월 만에 이를 철회하였다²⁹⁾. 1975년 2월에는 포드 대통령이 에너지 안보 확보 차원에서 수입원유에 배럴당 2달러의 관세를 부과했으나 의회 반대 등으로 연말에 폐지되었다³⁰⁾. 이처럼 한시적으로 시행된 관세정책 하에서 수입수요가 일시 둔화되었으나^[그림 2], 당시 성장은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였고^[그림 3] 물가상승률은 하락하였다^[그림 4].

트럼프 정부 들어 기초적 하락하던 美관세율이 급등

닉슨-포드 정부 관세 부과 후 수입비중 일시 하락

[그림 1] 美수입관세율 추이¹⁾



주: 1) 수입관세율 = 관세수입액/상품수입*100
자료: BEA, Schmitt-Grohé and Uribe(2025)

[그림 2] 美수입비중(GDP 대비) 추이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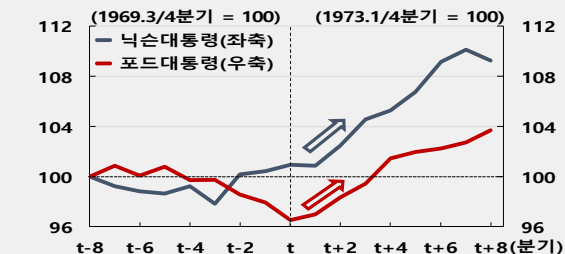


주: 1) t기는 수입관세율 인상 시기
자료: BEA

닉슨-포드 정부 관세 부과 후 성장 안정적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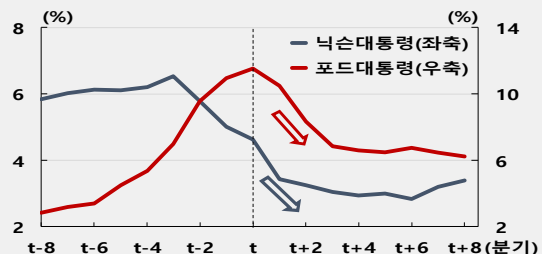
닉슨-포드 정부 관세 부과 후 인플레이션 하락

[그림 3] 美GDP 추이¹⁾



주: 1) t기는 수입관세율 인상 시기
자료: BEA

[그림 4] 美근원물가상승률 추이¹⁾



주: 1) t기는 수입관세율 인상 시기
자료: BLS

이와 대조적으로 2018년 이후 높아진 美관세율은 과거의 한시적 관세인상과 달리 지속되는 모습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美中 패권경쟁을 배경으로 도입한 對中 관세 조치는 바이든 정부를 거쳐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전보다 광범위하고 강도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관세정책의 기초 변화는 경제변수의 흐름에서도 닉슨-포드 시기와 차별화된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2018년 對中 관세 부과 이후에는 과거와 달리 수입비중이 일정 기간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인플레이션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³¹⁾[그림 5-6]. 또한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한층 높아진 관세율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 내 수입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그림 7].

28) Irwin(2020)에 따르면 미국 관세는 세수 확보, 국내 산업 보호, 상대국 무역장벽 감축이라는 3가지 목적하에 부과되었다.

29) Irwin(2013), "The Nixon Shock after Forty Years: The Import Surcharge Revisi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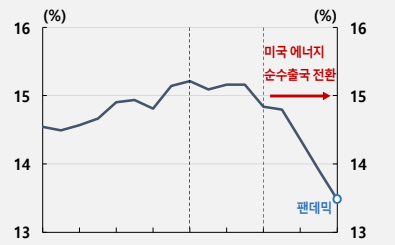
30) 1973년 오일쇼크 이후 중동산 원유 의존도 급증으로 미국의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자, 포드 대통령은 수입원유에 대한 관세를 통해 국내 원유 가격을 방어하고 미국산 원유 생산 기반을 확충하여 에너지 독립을 도모하고자 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압력, 소비자 부담 증가, 무역 파트너국 반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연말에 폐지되었다.

수입비중 일정 수준 유지하다가
2019년 이후 하락

2018년 관세 부과 후 인플레이션을
전반적 상승, GDP 안정적 흐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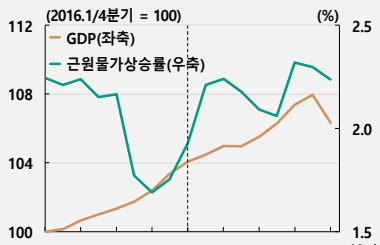
수입품 및 관세 영향이 큰
미국산품 중심으로 물가 상승

[그림 5] 美수입비중(GDP 대비) 추이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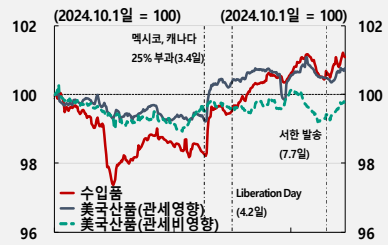
주: t기는 수입관세 인상 시기(18.1분기)
자료: BEA

[그림 6] 美GDP1)와 근원물가상승률2)



주: 1) 2016.1/4분기 대비
2) t기는 수입관세 인상 시기(18.1분기)
자료: BEA, BLS

[그림 7] 미국소매점 가격지수 추이



자료: Cavallo et al.(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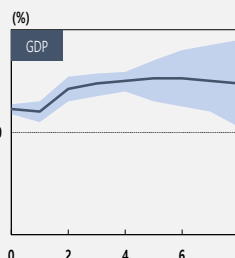
이처럼 美수입관세 변화의 경제적 영향은 그 지속 기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관세 변동은 대부분 일시적 성격을 띠었고 그 영향도 제한적이었으나³²⁾, 최근처럼 고율의 관세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그 파급효과가 훨씬 클 가능성이 있다.

Schmitt-Grohé&Uribe(2025)가 상태공간^{state-space} 모델을 통해 美관세 변화를 일시적·항구적 충격으로 분해^[그림 1]하여 경제적 효과를 실증 분석한 결과를 보면, 관세의 지속성 여부에 따라 무역수지, 성장 및 물가, 통화정책 등 전반적인 거시지표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 먼저, 일시적 관세 충격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며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³³⁾³⁴⁾^[그림 8]. 무역수지 개선은 관세 부과가 한시적일 것으로 예상될 때 경제주체들이 관세 철폐 시점까지 수입을 연기하는 기간간 대체^{intertemporal substitution} 행태를 보이는 데 기인한다. 반면 항구적 충격은 인플레이션의 일시적 확대^{물가수준 영구적 상승}와 단기적 통화긴축을 수반하지만, 무역수지에는 유의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그림 9]. 관세가 항구적으로 높아질 경우 수입재 가격 상승으로 국내재에 대한 대체 수요가 증가하여 수입이 감소하게 되나, 통화긴축에 따른 달러화 절상으로 수출 경쟁력이 저하되면서 수출도 동반 위축된다. 결과적으로 수입과 수출이 동시에 감소함에 따라 무역수지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게 된다³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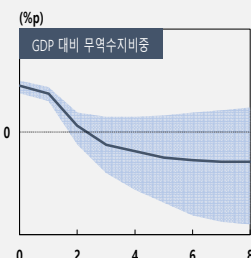
일시적 美관세충격: 미국 내 인플레이션 유발하지 않고 무역수지 개선으로 이어짐

[그림 8] 일시적 美관세충격에 대한 미국경제 영향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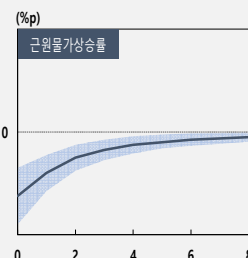
[그림 8-1]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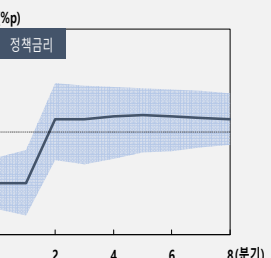
[그림 8-2] 무역수지 비중



[그림 8-3] 근원물가상승률



[그림 8-4] 정책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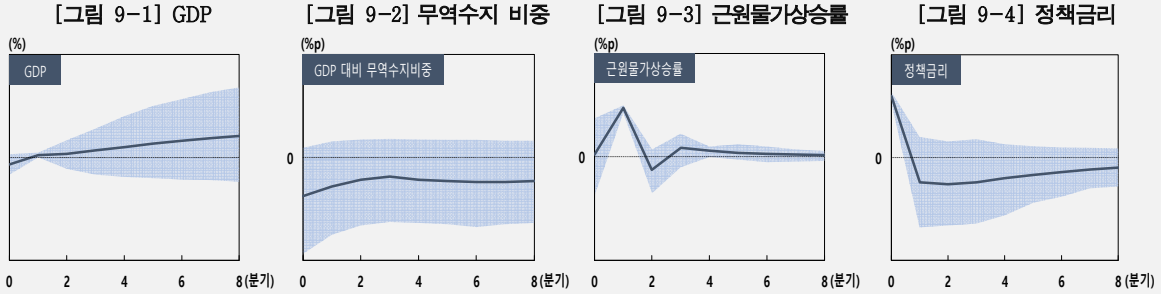


주: 1) 음영은 90% 신뢰구간을 의미하며, 8기 이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생략
자료: Schmitt-Grohé & Uribe(2025)

31) 2018.1/4분기(t) 미국의 관세부과 이후 대체로 안정되던 美수입비중은 2019.1/4분기(t+4)이후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는 2019년 미국의 에너지 순수출국으로의 전환(EIA 2024, Yücel et al. 2019)과 2020.1/4분기(t+8)에 발발한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교역의 급격한 위축(BEA 2021)에 주로 기인한다.

항구적 美관세충격: 미국 내 일회성 인플레이션 확대 유발하나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미미

[그림 9] 항구적 美관세충격에 대한 미국경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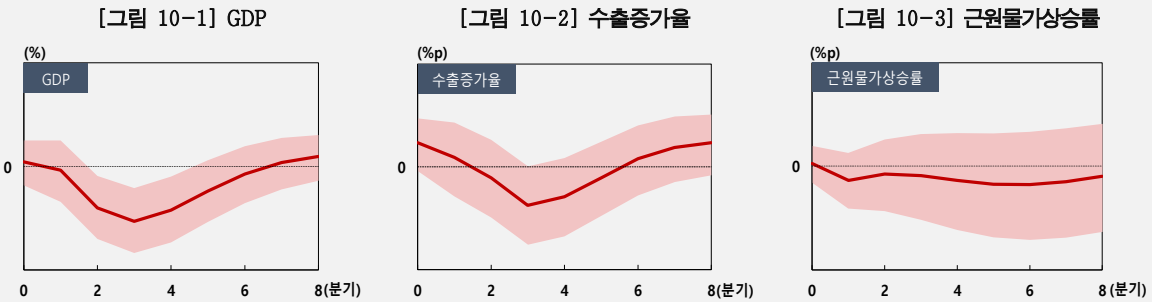


주: 1) 음영은 90% 신뢰구간을 의미하며, 8기 이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생략
자료: Schmitt-Grohé & Uribe(2025)

美관세충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충격의 지속성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다. Schmitt - Grohé & Uribe(2025)을 통해 식별된 美관세의 일시적/항구적 충격을 외생변수로 활용한 구조 VAR 모델을 추정³⁶⁾한 결과, 일시적 관세충격은 우리 수출에 단기간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0-12]. 미국의 수입수요 감소로 對美 수출이 일시적으로 위축될 수 있으나, 관세 철회에 대한 기대로 수출기업들이 미국시장에서 이탈하거나 공급망 조정을 추진하는 경우가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출 둔화는 성장에도 하방 압력을 가하지만 일시적 충격의 특성상 그 영향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우리 물가에 대한 하방압력도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10].

일시적 美관세충격: 일시적 수출둔화 통해 우리 성장의 하방압력 작용

[그림 10] 일시적 美관세충격에 대한 우리경제 영향¹⁾



주: 1) 음영은 90% 신뢰구간을 의미하며, 8기 이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생략
자료: 한국은행

32) Schmitt-Grohé & Uribe(2025) 분석 결과, 美관세 변동의 약 80%가 일시적 요인으로 설명되어 역사적으로 관세정책의 경제적 영향은 주로 일시적 충격의 형태로 발현되었으며, 경기변동에서 관세충격이 차지하는 정도도 미미하게 나타났다.

33) Cavallo et al.(2021)에 따르면 일시적 관세 충격에 대해 수입업자가 마진 손실을 감수하면서 소비자에게 인상분을 완전히 전가하지 않을 수 있어 관세 인상이 반드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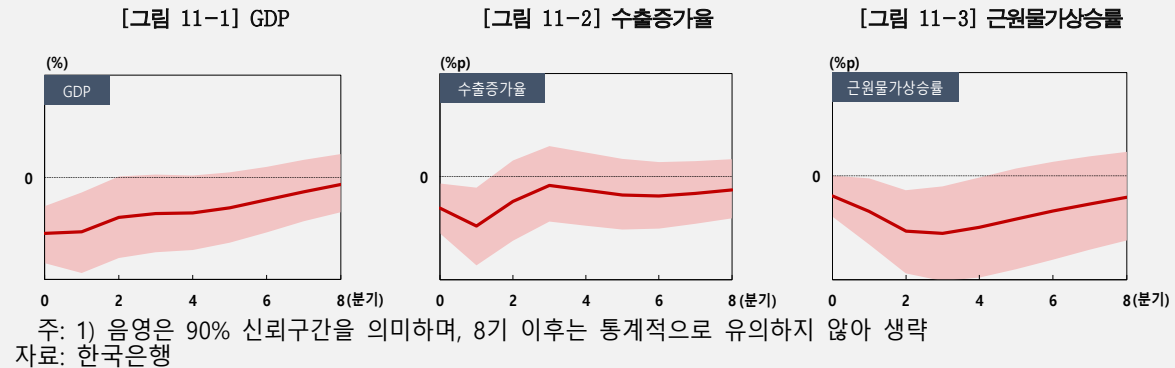
34) 일시적 관세 충격에 대한 물가의 디스인플레이션적인 반응에 대해 Schmitt-Grohé & Uribe(2025)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관세 상승은 상대가격의 변화를 나타내는 반면, 인플레이션은 명목가격의 일반적 상승이다. 상대가격 변화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충격의 지속성, 마크업 행태, 총수요, 통화정책 스탠스 등 다양한 요인에 의존한다.”

35) Auclert, Rognlie, & Straub (2025), “The Macroeconomics of Tariff Shocks”

36) 구조 VAR 모델은 미국 수입관세 충격, GDP, 무역수지 비율(GDP 대비), 수출증가율(전년동기대비), 근원물가상승률, 정책금리로 구성된다. 또한, 대외요인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외생블록(block exogeneity)으로 미국의 GDP, 근원물가상승률, 정책금리를 포함하였다. 모형내 GDP는 HP필터로 추출한 순환변동치를 사용하였다. 모형 추정기간은 2000.1/4분기부터 2024.4/4분기이며, 시차는 2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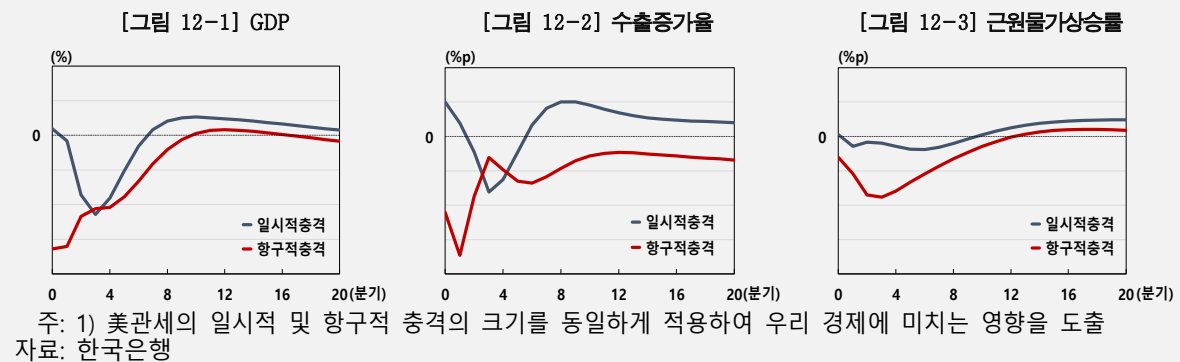
항구적 美관세충격: 수출의 구조적 둔화에 더해 금융경로 통해 우리 성장 및 물가상승률 둔화

[그림 11] 항구적 美관세충격에 대한 우리경제 영향



항구적 美관세충격 하에서 성장·물가·수출에 대한 하방압력 더 크게 나타남

[그림 12] 美 일시적·항구적 관세충격의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 비교1)



반면 항구적 관세충격은 우리 경제에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높은 관세율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우리 수출기업들은 미국 시장에 대한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게 되며 생산기지 이전과 공급망 다변화 등 구조적 대응에 나서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으로 수출은 일시적 충격보다 훨씬 큰 폭으로 감소하며, 그 영향도 장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12]. 이와 같은 수출의 구조적 둔화는 성장과 물가에 하방압력을 가하며, 여기에 미국의 물가상승과 통화긴축이 글로벌 금융여건 악화를 통해 국내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그림 11]

이상의 분석 결과, 美관세충격의 지속성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경로 및 영향의 크기는 현저히 다르게 나타난다. 일시적 관세충격은 주로 무역경로를 통해 제한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항구적 충격은 무역경로뿐 아니라 금융경로를 통해서도 보다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하방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관세로 보호받는 국내 이해관계 집단의 형성과 '자국 산업 보호'라는 사회적 명분이 결합되면서 정치적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지속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美관세정책의 장기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기적 대응을 넘어 수출 다변화, 공급망 안정성 제고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체질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겠다.

참고 2 중국 수출전환(redirection)이 한국 對중 수입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對중 관세가 인상되어 對중 수입이 감소할 경우, 중국산 공산품이 우리나라로 수출전환되며 추가적인 물가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³⁷⁾ 중국내 부동산 디레버리징 등으로 내수 증대 여력이 낮은 상황에서 對미 수출 감소로 인한 초과공급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타 국가들로 저가 수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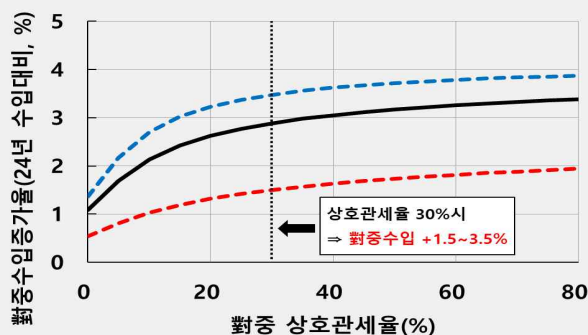
미국의 수입품에 대한 세부 품목별 예상 관세율과 수입의 관세탄력성을 감안하여, 전체 對중관세 인상에 따른 미국의 수입감소를 추정³⁸⁾한 결과, 對중 상호관세율을 30%로 가정시 미국의 對중 수입은 24.7%^{저탄력성}에서 56.9%^{고탄력성}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중국의 對미수출 감소분이 여타 교역국으로 수출전환된다고 가정시, 우리나라의 對중 수입은 최대 1.5~3.5% 증가가 예상된다.³⁹⁾

이러한 중국산 제품의 수출전환은 우리나라의 수입물가 하락으로 이어져,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Bayesian VAR(BVAR) 모형을 활용⁴⁰⁾해 이러한 물가하락 영향의 크기를 추정한 결과, 수출전환으로 對중 수입이 최대 1.5~3.5% 증가⁴¹⁾할 경우 우리나라 공산품 수입물가 상승률은 0.7~1.6%p,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05~0.12%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⁴²⁾ 중국산 제품 수입 증가로 인한 수입물가 파급은 단기에 집중되는 반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시차를 두고 최대 1년까지 유의하게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對중 수입 감소로 수출전환이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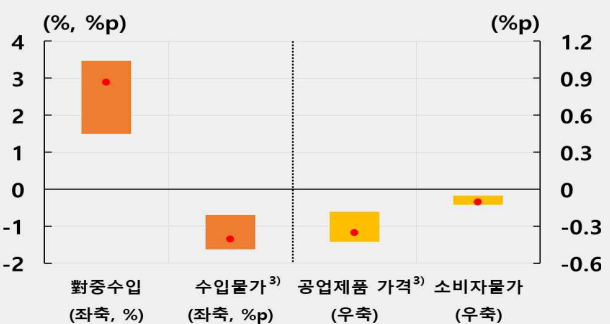
수출전환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05~0.12%p 하락

[그림 1] 美 對중상호관세율별 한국의 對중수입 증가율¹⁾



주: 1) Boehm et al.(2023) 등 최근 4개 연구의 관세에 대한 수입탄력성 상·하한과 평균치를 적용
자료: UN Comtrade, US Census Bureau, 자체 추정

[그림 2] 중국 수출전환시 우리 물가에 미치는 영향¹⁾²⁾



주: 1) 미국의 對중상호관세는 30%로 가정
2) 점은 수입의 관세탄력성의 기본에, 박스는 탄력성의 상·하한에 상응하는 각 변수의 반응을 나타냄
3) 수입물가(공산품), 공업제품(석유류 제외) 기준
자료: Boeckelmann et al.(2025)을 원용하여 자체 추정

37) 트럼프 1기 정부(2017~2020년)의 對중관세 부과로 중국의 對미 수출은 한국, EU, ASEAN, 인도 등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25.6월)」 BOX C를 참조하기 바란다.

38) Boeckelmann et al.(2025)의 방법을 확장하여 세부품목(HS10)별 관세율과 Boehm et al.(2024) 등 4개 연구가 추정한 미국 수입의 관세탄력성을 활용하여 품목별 수입감소분을 계산하였다. 국가별 수출전환액은 미국의 對중수입 감소분이 중국의 수출구조(2024년 기준)에 맞춰 여타국에 모두 수출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추정하였다.

39) 54%의 對중상호관세가 부과되는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미국의 對중 수입은 29.7~62.0%까지 감소하고, 이 경우 우리나라의 對중수입은 1.8~3.8%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2024년 대비 기준). 다만 여기에는 우리 경제의 수출·내수 위축에 따른 유발수입감소 효과는 감안되지 않았다.

40) Boeckelmann et al.(2025)를 원용하되,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의 물가는 중국 및 세계 변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41) 중국 산업생산과 수출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안정적인 장기관계를 감안하여 BVAR 모형상 식별된 산업생산 +1.0%p 공급충격이 중국 수출 +1.8%p 충격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42) 수출전환의 전체 소비자물가에 대한 영향은 직접적 영향을 받는 공업제품(석유류 제외)가격 상승에 대한 영향(0.18~0.42%p 하락)을 추정한 후, 해당 품목의 소비자물가내 가중치(29.2%)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참고 3 관세부과시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의 경쟁력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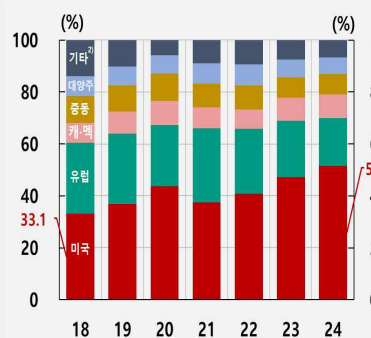
한·미 관세협상이 합의^{25.7.30일}되면서 향후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일본, 유럽연합(EU)과 동일한 15%가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은 2012년 3월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누려왔던 무관세 혜택을 상실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2.5%의 관세를 적용받던 일본, EU 등 對미수출 경쟁국에 대한 비교우위도 사라지면서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2024년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물량기준}의 절반을 넘어서는 51.5% 제1의 수출 시장인 만큼^{그림1}, 이러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자동차 對미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에 하방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미국 자동차 시장의 최근 동향과 관세협상 결과에 따른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의 미시장 내 경쟁력 변화에 대해 점검하였다.

미국 자동차 시장의 최근 동향

2024년 미국의 자동차 시장^{내수판매 기준}은 전세계 18.7%로 중국^{29.1%}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이다⁴³⁾. 2020년 팬데믹의 영향으로 생산과 내수판매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이후 반등하여 2024년 생산은 1,052만대, 내수판매는 1,585만대를 기록하였다.^{그림2} 美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되는 차량 중 내연기관차가 80%, 전기동력차^{BEV, PHEV, FCEV} 및 하이브리드차^{HEV}가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전기동력·하이브리드차의 판매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비중도 가파르게 상승^{20년 5.2% → 24년 20.0%}하고 있다. 주요 자동차 기업들의 국적별 내수판매 점유율을 살펴보면 미국계^{GM, Ford, Tesla, Stellantis} 등 41.8%, 일본계^{Toyota, Honda, Nissan} 등 37.1%, 한국계^{현대자동차, 기아} 10.8%, 유럽계^{BMW, Audi, M-Benz, Volvo} 등 10.3%로 우리 기업들은 일본계, 유럽계 기업들과 미수입차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다. 우리 기업들은 준중형SUV, 전기동력·하이브리드차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데, 팬데믹 이후 품질 향상, 브랜드가치 상승 등에 힘입어 미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다.^{그림3}

미국은 우리 자동차 산업의 제1 수출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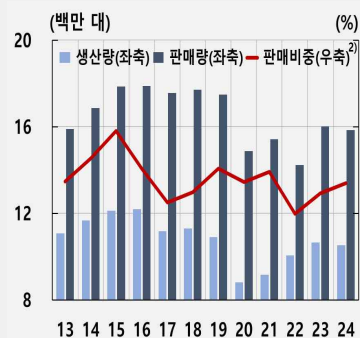
[그림 1] 한국의 지역별 자동차 수출 비중¹⁾



주: 1) 물량(대수) 기준
2)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자료: KAMA

미국의 자동차 내수시장은 세계 2위 규모로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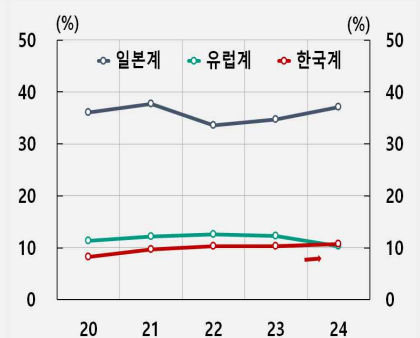
[그림 2] 미자동차 시장 생산 및 판매¹⁾



주: 1) 물량(대수) 기준
2) 전세계 판매에서 미시장 비중
자료: KAMA

미수입차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 점유율은 최근 상승 추세

[그림 3] 미수입차 시장의 국적별 점유율¹⁾



주: 1) 판매물량(대수) 기준
자료: Ward Intelligence, KAMA, 한국은행

43) 한편, 미국 자동차 시장의 생산규모는 전세계 11.3%로 세계 2위이며, 중국이 세계 1위(32.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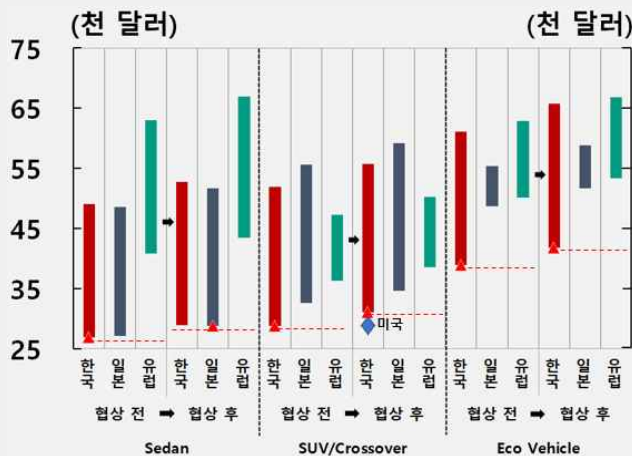
자동차 경쟁력 변화: ①가격, ②품질, ③공급망

美관세부과로 인해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일본, 유럽 등과 보다 치열하게 경쟁하게 될 것⁴⁴⁾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변화는 **판매 측면에서의 ①가격, ②품질^{비가격} 경쟁력, 생산 측면에서의 ③공급망 경쟁력**을 통해 평가해 볼 수 있다.

①**가격 경쟁력**⁴⁵⁾은 국적별 주요 기업들이 수출 및 현지생산을 통해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차종별 가격 범위⁴⁶⁾를 통해 살펴보았다^{그림4)}. 세단^{Sedan}은 현재 한국계와 일본계 기업간 가격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러나 동일 관세율이 적용^{한국: 0→15%, 일본: 2.5→15%}되고 가격인상이 나타나면서, 동급 차량중 최저가 차량이 한국계 기업이 아닌 일본계 기업 생산차량으로 바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기업들의 주력 품목인 SUV 차량은 현재 일본계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 우위가 커서 동일 관세율 적용시에도 이러한 우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세가 없는 미국^美 차량의 최저가격보다는 한국^韓 차량의 최저가격이 높아져 수요가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친환경차^{전기동력·하이브리드차}는 美관세부과에도 가격경쟁력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관세부담의 50%를 가격에 반영할 경우, Sedan·SUV·Van 차종에서 최저가격 차량이 일본계(세단) 및 미국계(SUV, Van)로 바뀌게 되어 한국계 기업의 가격경쟁력 저하가 우려

[그림 4] 美수입차 시장 주요 기업의 차종별 가격 범위1)



주: 1) 동일 차종별 동급 차량들의 권장소비자가격 범위(최소~최대)를 막대그래프로 나타내고 수입국 중 최저가격 수준을 점선으로 표시

자료: S&P Global (MarketScan), 한국은행

[표 1] 美수입차시장의 차종별 최저가격

차종	국적별	관세협상 전	관세협상 후
Sedan	한국계	100.0	107.5
	일본계	101.0	107.2
	유럽계	152.2	161.7
SUV /Crossover	한국계	100.0	107.5
	일본계	113.2	120.3
	유럽계	126.0	133.9
Eco Vehicle	한국계	100.0	107.5
	일본계	125.0	132.8
	유럽계	128.9	137.0
Van	한국계	100.0	107.5
	일본계	107.4	114.1
	유럽계	145.6	154.7

주: 1) 주요 차종별 동급의 2025년 권장소비자가격 평균 기준 (관세협상 전 한국계=100으로 표준화)

2) 관세협상에 따른 추가부과 관세율의 절반에 해당되는 가격 인상을 가정

3) 파란색은 최저가격을 표시

자료: S&P Global (MarketScan), 한국은행

44) 반면, 미국계 자동차 기업은 관세부과로 한국·일본·유럽계 기업들에 비해 가격 측면에서 보다 유리해졌다. 예를들어, 관세협상 전 SUV/Crossover, Van 차종에서 권장소비자가격 평균이 최저인 모델은 한국계 기업이 생산한 차량이었으나, 관세협상 결과를 적용할 경우 미국계 기업이 생산한 차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45) 미국이 자동차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완성차를 수출하는 기업은 일부는 자체적으로 흡수하고 일부는 부품기업 및 소비자에게 전가한다. 금번 관세협상 결과에 따른 가격 인상 효과는 미국 자동차 시장의 수급 구조와 최근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발표한 가격인상 경향 등을 고려하여, 각 국가별로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관세율의 절반 수준(한국 7.5%, 일본 및 EU 6.25%)을 가격 인상률에 반영한다고 가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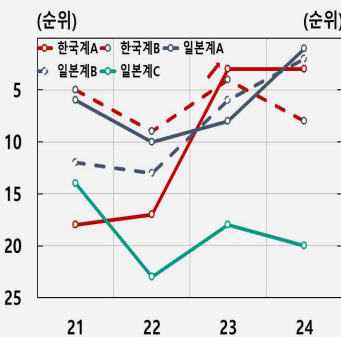
46) 가격은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주요 차종별 2025년 권장소비자가격(MSRP) 기준이며, 각 차종의 트림별(옵션·사양구성에 따른 등급) 가격 차이가 있어 평균을 적용하였고 개별적인 딜러 인센티브는 반영하지 않았다. 가격 범위는 각 국적별 주요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차종별 동급(크기[Segment] C, D 기준)의 주요 차량 모델들 가격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② **품질비가격 경쟁력**은 자동차 브랜드별 초기 품질과 장기^{내구} 품질의 비교우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최근 한국계 자동차의 초기 품질은 전반적으로 상승세에 있으나, 일본계 주요 기업들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것으로 평가^{그림5}된다. 또한, 한국계 자동차의 내구 품질은 최근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있다고 평가^{그림6}되는데, 장기적인 설비 및 R&D 투자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에게는 관세비용 이외의 또다른 부담이 될 것이다.

③ **공급망 경쟁력**은 국적별 주요 기업들이 얼마나 미국 현지에서 완성차를 원활하게 생산할 수 있는지, 관세부담 없이 미국 현지생산 공정에 부품을 조달할 수 있는지에 좌우된다. 먼저,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은 일본계 및 유럽계에 비해 미국 현지에서 생산 가능한 완성차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그림7}. 또한, 주요 완성차 업체가 미국 현지생산 차량에 대해 부품을 현지 조달하는 비율도 경쟁국인 일본에 비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⁷⁾.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관세부과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생산비용 증가 압력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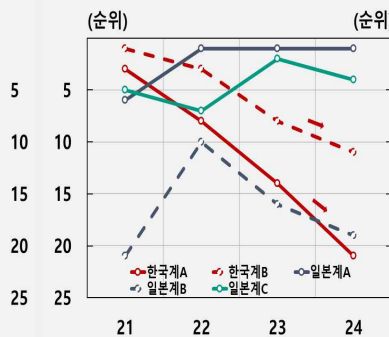
최근 한국계 자동차 브랜드의 초기 품질 경쟁력은 상승세이나, 우리 기업들의 美 현지생산 비중은 내구 품질 경쟁력은 하락세 **주요 경쟁국 대비 낮은 수준**

[그림 5] 국적별 주요 브랜드의 초기 품질경쟁력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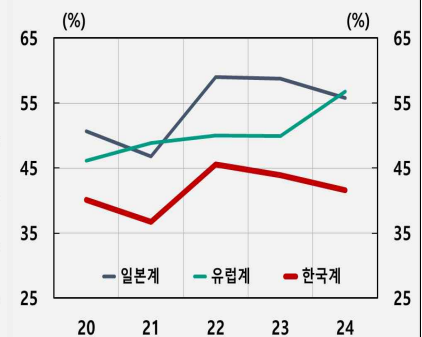
자료: J.D. Power 각년도

[그림 6] 국적별 주요 브랜드의 내구 품질경쟁력 순위



자료: J.D. Power 각년도

[그림 7] 주요 국적별 자동차 현지생산¹⁾ 비중



주: 1) 현지생산 비중은 주요 기업
의 미국 시장 판매량 대비
현지생산 비율

자료: Ward Intelligence, KAMA,
한국은행

종합평가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 자동차 산업이 받는 영향은 기업들의 전략적 대응 정도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므로 미리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장상황에서 본다면, **미국에서의 가격 경쟁력은 일본, EU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이며, 관세부담을 피할 수 있는 美현지생산 공급망도 이들보다 취약해 생산비용 증가가 우리 기업들에게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美현지생산 공급망 구축과 품질 제고를 위해 對美 설비 및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게 되면 국내 자동차 생산 및 인프라 감소가 구조화되면서 국내 경제성장에도 중장기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47) 최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은 미국 내 생산차량의 부품 현지 조달률을 한국계 기업(현대기아차 48.6%)이 경쟁국인 일본계 기업(Honda 62.3%, Toyota 53.7%)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하였다(산업연구원, 25.6월).

참고 4 美관세협상에 대한 주요 기관^{중앙은행·IB} 등들의 평가

우리보다 먼저 美관세협상을 합의한 주요국^{EU·일본·영국} **중앙은행**들은 최근 미국과 자
국간 관세협상 타결로 인해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었다**고 논평하면서도, 이번 합의
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여타 국가의 관세협상 내용과 구체적인 이행과정 등에 의존
하므로 **구체적 평가에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FYI>} 참조. 아울러, 관세 합의가
협상 직전 대비로는 의미있는 진전을 이룬 것이 분명하지만, 관세가 부과되기 전과
비교하면 **무역비용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강조하였다**.

주요 IB 및 외신들은 협상 타결로 **경제주체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관세율이 예상
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면서 교역환경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EU와 일본
의 경우 상호관세가 인상^{10%→15%} 되었지만, 자동차 관세 인하^{25%→15%}가 이를 대부분 상쇄
할 것으로 예상⁴⁸⁾되고 협상타결로 불확실성이 완화되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협상결
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對미수출 비중^{34%, 24년기준}이 높은 자동차 관
세가 인하됨에 따라 협상 직전 대비 평균관세율이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다⁴⁹⁾**. 다만, 기
존 한미 FTA로 인해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2.5%p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었음에
도 금번 합의로 양국 모두 동일한 관세^{15%}를 적용받게 된 점은 한국 **자동차기업에 다소
불리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우리 수출을 주도하는 **반도체**의 경우 협상전 美행정
부가 고율의 관세 부과를 예고함에 따라 향후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
던 상황에서, EU와 같이 **최혜국 대우** 보장을 합의사항에 반영했다는 점은 부정적 영향
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비관세 분야 합의내용 중 하나인 천억달
러 규모의 **美에너지^{LNG} 수입**은 한국의 연간 에너지 수입규모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추가
부담은 크지 않을 것⁵⁰⁾**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⁵¹⁾. 對미 투자펀드의 경우 집행방식·
시점·기간, 수익배분 구조 등이 확정되지 않아 현단계에서 평가는 이르다는 견해가 공통
적이다.

시장참가자들도 이번 무역협상이 대체로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의되었으며 이
는 향후 주요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된다. 협상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직후 주요 협상국의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⁵²⁾
협상국내 기업이나 일반국민 역시 금번 협상에서 일부 아쉬운 점은 있지만, 통상환경
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은 데 안도하며 대체로 협상결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
위기이다⁵³⁾.

48) EU와 일본의 對미수출액 중 자동차 비중(2024년 기준)은 각각 11%, 35%이다.

49) 한·미 협상 이후 일부 IB들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상향조정(GS: +0.1pp)하거나, 관세로 인한 GDP 감소분에 대한 추정치를 하향조정(Barclays: 114bp→105bp)하였다.

50) 24년 對미 에너지 수입은 232억달러로, 지난해말 종료된 중동산(오만·카타르) 장기계약 종료분(연간 56억달러 추정)의 일부를 미국산으로 대체함으로써 목표 4년 이내에 달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51) 그 외에 에너지 운송거리 확대에 따른 에너지기업의 운송비용 증가는 부정적일 수 있다는 시각과 에너지 수입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 공급망 확보는 긍정적이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52) 협상 발표 당일 STOXX50은 1% 수준까지 상승한 후 일부 조정(0.4%)되었으며, 닷케이지수도 전일대비 약 1.2% 상승하였다.

53) 美·일간 관세협상 타결 발표 직후 Reuter에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41개 기업 응답)에서 응답업체의 75%는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한미 관세협상 직후 진행된 일반국민 대상 조사에서 협상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중이 높았다(리얼미터 등).

이처럼 주요기관에서는 관세협상 합의를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美통상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세협상 합의내용의 세부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양국간 해석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우리나라가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던 반도체 품목관세의 경우 실제 세율·적용범위·부과시기 등과 관련해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거론된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선언과 번복이 이어지면서 최근 주요국과의 관세 합의에도 불구하고 경제주체들의 정책 신뢰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여전히 관세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중국의 경우** 對미수출 비중이 높은 데다 여타국에 비해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다른 국가로 **수출전환**을 본격화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ECB에서는 중국의 對미-對유럽 수출 구조가 유사한 상황에서 미중 무역긴장이 지속될 경우 유럽내 중국산 수입이 7~10% 증가⁵⁴⁾해 향후 물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FYI> 관세협상 타결에 대한 각국 중앙은행 (총재) 코멘트

(ECB) ECB는 미-EU간 관세 합의가 "일정한 진전(some progress)"을 의미하지만, 정책 불확실성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어 단기적으로 글로벌 교역 변동성이 지속되겠으며,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세계교역과 경제활동 전망에 중대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하였다.(25.8월, Economic Bulletin)

(UK) Bailey 총재는 英·美협상 타결이 "좋은 소식(good news)"이지만, 실효 관세율은 관세 부과 전보다 여전히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논평하였다. 덧붙여, 이번 미영협상 결과의 경제적 영향은 이번 합의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향후 다른 국가들의 협상결과에도 좌우된다고 언급하였다. (25.5월, Economic conference-Q&A session)

(BOJ) Ueda 총재는 美·日협상 타결은 "중대한 진전(big step forward)"이며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관세의 경제적 영향과 향후 무역정책 방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다고("It is not as if the fog will all clear at once") 밝혔다. (25.7월, 금융정책결정회의 기자회견)

54) 부분균형모형(Boehm et al., 2023) 추정 시 최대 10%, 일반균형모형(Baqae and Farhi, 2024) 추정 시 7~9%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